



The Women's Studies

여성연구

2023 년 3호

The Women's Studies

2023년 3호

| 연구논문 |

- | | |
|---|-------------|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 정병삼 |
|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성 역할 가치관을 중심으로 | 황지선·민현주·정민철 |
|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여군에 대한 언론 보도 연구 | 조선웅 |
|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 홍세은 |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여성연구』는
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기초이론 및
관련 이슈를 탐색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입니다.

여성연구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 :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 원 :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기남 (사)인구보건복지협회

김남희 이화여자대학교 안숙영 계명대학교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돌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미주 울산과학대학교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김복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무현 상지대학교

김혜경 전북대학교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남윤주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기준에 의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 본 학술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여성연구』 2023년 4호 논문 공모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여성연구』는 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기초이론 및 관련 이슈를
탐색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입니다. 『여성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여성연구』 2023년 4호 (통권 119호)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1. 게재논문 내용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학문분야의 논문으로서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춰
작성된 연구 논문에 한합니다. 단,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2. 고지사항

2009년 이후 등재학술지 지위를 유지하던 『여성연구』가 2022년 학술지평가 미신청으로 인하여
2023년부터 등재후보학술지가 되었습니다. 본 편집위원회는 2023년에 ‘학술지 계속평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재선정되면 2023년 『여성연구』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등재학술지 논문으로 인정됩니다.

3. 우수논문 포상

2023년 『여성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4. 『여성연구』 투고요령

원고분량은 인쇄쪽수 20쪽(200자 원고지 120매 해당) 이내(요약 포함)로 하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고 편집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여성연구』 논문작성요령을 참조해야 합니다.

5. 투고자격

성평등 및 관련 정책 연구 전문가

6. 발행예정일 및 논문 마감일 논문접수 일정 및 관련사항

권호	발간예정일	논문접수 마감일
통권 119호	2023. 12. 31	2023. 10. 31

-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호에 게재할 논문의 편수와 순서를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이월 게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논문접수 기간 이후 접수된 논문의 경우, 다음호로 심사가 이월될 수 있습니다.

7. 논문제출방법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kwidi.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직접 논문 투고

8. 논문관련 문의

전화 : (02) 3156-7288 E-mail : journal@kwidimail.re.kr



The Women's Studies

2023 년 3호

| 연구논문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정병삼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성 역할 가치관을 중심으로

황지선·민현주·정민철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여군에 대한 언론 보도 연구

조선웅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홍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정병삼	5
2.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성 역할 가치관을 중심으로 황지선·민현주·정민철	31
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여군에 대한 언론 보도 연구 조선웅	57
4.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홍세은	89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

정병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2021년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과 그 영향에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2021년 청년사회경제패널 데이터에 대해서 다집단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적용했다. 총 2,04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남자는 1,074명, 여자는 967명이었고, 종속변수는 우울, 사회참여이며, 통제변수는 학력, 연령, 결혼, 가족동거 여부 등이고,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 지지 제공자 유형 등 2가지이다. 기저모형은 남녀 집단의 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했고, 대안모형은 자유롭게 추정한 것이다. 그 결과 대안모형이 더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 주었고,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별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성청년집단에게 주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났고, 특히 가족과 친구가 주는 정서적 지지가 여성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리두기에서 청년들의 우울을 감소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청년, 사회적 지지, 우울, 사회참여

*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2020~21년 청년경제사회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 육군3사관학교 교수(byong3@hanmail.net)

I. 서론

청년기는 15~24세, 19~35세 등 학자마다 다양하게 범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2020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한다(배정희, 2022). 청년기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대학 졸업, 취업, 연애, 결혼 등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한다(장휘숙, 2010). 청년들은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아정체성, 진로정체성 등을 확립하고, 취업과 결혼,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인지적, 정서적 역량을 갖추 수 있다(박은하, 2018; Jagers, Rivas-Drake, & Williams, 2019). 따라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학습, 체험,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재정적, 정보적, 정서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성보현 외, 2021; Howell, Hall, & Geeland, 2023).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의료 등 인류의 전 영역에서 큰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약 2년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수의 국민 및 세계인들에게 스트레스와 우울 등 심리적 문제를 초래했다(신예솔·박수현, 2022; Chen et al., 2020).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으로 다수의 국민이 고립감, 우울, 불안감 등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독거노인, 은둔형 청년 등 사회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계층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최영순, 2021; Ustun, 2021). 그중에서 청년층은 산업생산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국가발전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코로나 블루에서 회복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정주호 외, 2022; Howell, Hall, & Geeland, 2023).

대한민국의 20~30대 청년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소위 ‘N포 세대’라고 불리며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 초기 성인기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데 많은 난관을 경험하고 있었다(서연주, 2019).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결혼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을 경신하고 있다(비즈니스 포스트, 2023.5.15.). 청년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취약하여, 더 심한 정신적, 정서적 타격을 경험하고 있다(정주호 외, 2022; Volk et al., 2021). 보건복지부(2021)가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정신건강이 악화되었으나, 특히 20~30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우울감과 자살 생각 등 부정적 정신건강 지표가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사회적 지지가 우울, 자살생각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정주호 외, 2022; Grey et al., 2020; Li et al., 2021). 정주호 등(2022)은 잠재집단 분석을 적용하여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사회적 관계 형성과 노동시장 참여를 분석하여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규명했다. Grey 등(2020)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면봉채를 경험한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우울, 불안, 고립감 등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 Li 등(2021)은 청년기, 성인기, 장년기 등으로 연령층을 구분하여 사회적 지지가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 고립감, 불면증 등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극복하는 데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모든 연령층에서 우울, 불안 등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경험했고, 특히 청년층에서 피해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회적 지지는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대응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운동, 산책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여성은 돌봄, 격려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완화하려고 한다(김재희·김현경, 2017; Brougham et al., 2009). 즉, 남녀는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다르고, 지지 제공자와의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다(Graves et al., 2021). 그러나 팬데믹 기간 발생한 심리적 문제, 사회참여 등에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에 있어 남녀 간의 성별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에 있어 남녀 간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더 효과적인 지지와 제공자 유형을 규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는 무엇인가? 또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주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가?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는 무엇인가? 또한 사회적 지지가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효과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1970년대부터 건강과 정서, 심리 분야에서 꾸준히 주목받아 온 개념으로서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평가적 자원을 의미한다(Cobb, 1976; 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는 요인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은 지지 제공자, 지지의 유형, 지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지각을 하는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사회적 지지를 분류하고 있다(Cohen & Syme, 1985).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중심으로 물질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평가적 지지(appraisal support)를 하위요인으로 제시했다. 물질적 지지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빌릴 사람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다(박지원, 1985). 정보적 지지는 어떤 상황을 파악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필요한 지식, 견해, 전문성 등을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나는 필요할 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다(Boberg et al., 2003). 정서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신뢰, 공감, 돌봄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는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다(Reblin & Uchino, 2008). 평가적 지지는 의사결정을 하거나 상황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피드백, 사회적 비교, 우위적 요소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다(Hurd et al., 2018).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부모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발달단계에 따라 중요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원에 따른 효과 차이도 발생한다(배점모, 2015; Taylor, 2011). 예를 들어,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송호관, 2022; Sandler et al., 1989),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의 지지가 주는 효과가 크다(Camara, Bacigalupe & Padilla, 2017).

사회적 지지가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변인들에 주는 효과에는 성별 차이가 있는데, 엄태완·강명진·최정순(2008)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스

트레스, 무망감(hopelessness), 자살생각 등 부정적 정서에 끼치는 사회적 지지의 예방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손보영 등(2013)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들의 진로계획 설정에 주는 영향에서 남자 대학생은 일의 가치와 의미를 매개로 영향을 주는 반면 여자 대학생에서는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영향을 주었다. Flaherty와 Richman (1989)가 수행한 연구에서도 미국 여자 대학생들이 남자 대학생 집단보다 요구하는 사회적 지지가 더 명확하고,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Hann 등(2002)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우울 증에 미치는 예방적 효과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주는 영향과 성차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봉쇄와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재난상황을 초래했다(Horton, 2021). 팬데믹 기간동안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하락했고,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감과 우울감, 빈곤 등 정서적, 재정적 곤란도가 증가했다(통계청,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경험했고, 청년층의 28%가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꼈다. 같은 기간 청년층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9.4명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서 자살 방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이희정·이현, 2022).

우울은 자살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으로서 모든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울증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황지현·채정호, 2017).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취약한 청년층이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 경제적 빈곤 등을 경험하게 되면 40대 이상 연령층보다 심리적 문제를 더 크게 경험한다(서울시청년지원활동센터, 2021). 재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는 우울과 불안 감인데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가 길어질수록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가했다(최해연·최현아, 2022; Ilhan, Ahmet, & Metin, 2021).

고립과 우울에 대한 예방적, 보호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의 효과에 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팬데믹 기간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도 규명되었다(신예슬·박수현, 2022; Grey et al., 2020; Guo et al., 2021). 신예슬과 박수현(2022)은 20대 청년층이 팬데믹 기간 사

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느끼는 고립과 우울감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예방과 보호효과를 보고했다. Guo와 동료들(2021)은 중국 대학생들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조치로 인해 대다수의 청년들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를 경험했는데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Grey와 동료들(2020)이 2,000여명의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청년들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유선, 2020).

한편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문제에 주는 효과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엇갈리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김효정·이승연·노경란(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불안에 주는 완화 효과가 남정보다는 여성에게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반면, Fusilier, Ganster, & Mayes(1986)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주는 예방적 효과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Day와 Livingston(2003)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친구의 정서적 지지의 효과를 크게 지각한다고 했으나,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하면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요컨대 사회적 지지가 갖는 심리적 문제의 보호 효과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일부 성차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주는 보호적 효과에 관해서 연구가 많지 않고, 성차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를 통해서 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지위, 결혼여부, 주거, 학력 등이 우울에 주는 영향을 통제한 후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주는 영향의 성차를 규명할 수 있다.

3. 사회적 지지가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과 성차

청년기(성인초기)는 생애발달 과정에서 대학 진학, 취업, 연애, 결혼, 동호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시기이다(Mayseless & Keren, 2014).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년들은 활발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최아영, 2022). 청년기의 주요한 사회참여는 대학에서의 학업수행, 취업, 취미를 위한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기타 봉사활동 등이 있다(곽윤경, 2021; Reis et al., 1993).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층의 사회활동과 참여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는데, 통계청(2022)이 시행한 국민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2020~2021년 팬데믹기간에 청년층의 사회적 모임, 노동참여, 학업 지속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활동이 감소했다. 또 사회참여가 감소하여 불안, 우울, 고립감 등 다양한 심리적, 정신건강 측면의 문제가 발생했다(김미숙·강선경, 2021; Farboodi, Jarosch, & Shimer,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김혜정과 최영기(2020)는 팬데믹 초기 타격을 입었던 항공운항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 활동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주는 긍정적 영향을 규명했는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열악한 상황에서도 취업준비 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한다. Heaney와 Israel(2008)은 사회적 지지가 성인의 건강증진 행동에 영향을 주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활동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위축된 청년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한다. Lisitsa와 동료들(2020)은 팬데믹 기간 사회적 지지가 청년들의 외로움과 소셜미디어 사용 및 인간관계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했는데,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은 청년일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나지만,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청년은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실제적인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활동은 감소한다.

팬데믹 이전에도 청년들의 은둔형 고립 문제는 크게 대두되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치열한 입시 및 취업경쟁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낙오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정근하·노영희, 2022). 코로나19 팬데믹은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는데(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1; Farboodi, Jarosch, & Shimer, 2021),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발생하는 원인은 성장과정에서 부정적 양육 경험, 학교폭력, 입시 및 취업 실패, 성격 등 다양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는 고립형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잠식했다(유민상·신동훈·이민정, 2021).

사회적 지지가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주는 긍정적 영향에 관해 다양한 선행연구가 보고되었고(정주호 외, 2022; Guo et al., 2021), 사회활동 참여에 주는 효과의 성별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도 보고되었다(손보영 외, 2013; 조영오, 2020; Alsubaie et al., 2019). 손보영 등(2013)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준비행동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주는 영향의 성별 차이를 규명했는데, 남학생은 사회적 지지가 일의 의미라는 변수를 매개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진로정체감이라는 변수를 매개하여 진로를 위한 활동에 영향을 준

다고 보고했다. 조영오(2020)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로서 사회적 지지를 제시했는데, 남녀 집단에게 주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Alsubaie 등(2019)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활동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남학생은 친구의 지지가 크게 작용했으나, 여학생은 부모, 가족의 지지가 크게 작용했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사회활동 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유형에 따라서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 제공자에 따라서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2021년도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데이터의 총 응답자는 2,041명이다.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승인을 거친 국가승인 통계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구의 전국 18~34세까지 청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표집을 적용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했다. 이를 통해 전국 청년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패널데이터를 구축했다. 2021년도 데이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반영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인 6~8월 사이에 수집되었으므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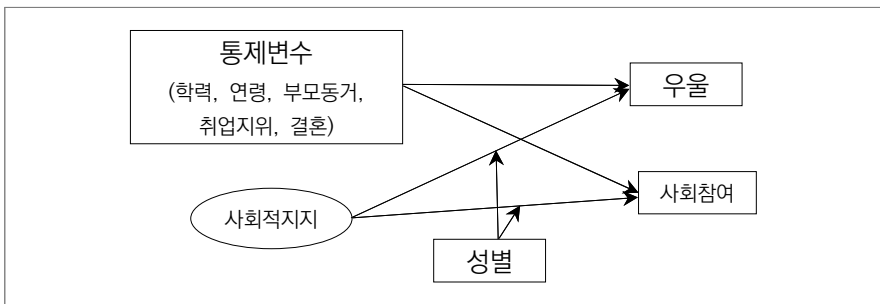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2,041	100
성별	남자	1,074	52.6
	여자	967	47.4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대	만18~24세	773	37.9
	만25~34세	1,268	62.1
결혼 여부	결혼	345	16.9
	이혼·사별	5	0.2
	미혼	1,691	82.9
대학 진학 여부	대학 진학	1,573	77.1
	대학 미진학	468	22.9
주거	부모와 동거	1,206	59.1
	일시적 분거	110	5.4
	독립	725	35.5
취업 지위	정규직	885	43.4
	비정규직	301	14.7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에 제시했는데, 연구모형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 연령, 부모와의 동거여부, 취업지위, 결혼여부 등 통제변수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를 규명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과 사회참여이고, 통제변수는 학력, 지역, 부모와의 동거 여부, 취업 지위, 결혼여부 등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이다.



[그림 1] 연구모형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종속변수, 통제변수,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구의 대표문항, 문항수, 신뢰도 등은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종속변수 가운데 우울은 “우울하게 지냈다”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는 Cronbach 알파계수 .87로 나타났다. 사회참여는 “가족과의 교류가 있다”, “소속된 집단이 있다” 등 사회적 관계, 교류 등을 묻는 12문항으로 리커트 6점 척도이며, 신뢰도는 알파계수 .88이다.

<표 2> 연구모형의 변수 및 측정도구

구분		대표 문항(척도)	문항수	신뢰도 (알파계수)
종속 변수	우울	‘우울하게 지냈다’ 등 리커트 4점 척도	9	.87
	사회 참여	대면교류, 비대면교류 등 리커트 6점 척도	12	.88
통제 변수	학력	대학 진학 여부(1=해당, 0=비해당) 이분변수	1	-
	연령	만 나이 비율척도	1	-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1=해당, 0=비해당) 이분변수	1	-
	취업 지위	정규직 여부(1=해당, 0=비해당) 이분변수	1	-
	결혼 여부	결혼 여부(1=기혼, 0=미혼) 이분 변수	1	-
독립 변수	사회적 지지	유형측면(물질, 정보, 정서) 리커트 4점 척도	12	.92
		제공자(가족, 친구, 학교, 공공기관) 리커트 4점 척도	12	.91

통제변수는 학력(대학 진학 여부), 연령(만 나이), 부모와의 동거 여부, 취업 지위(정규직 여부), 결혼여부 등 이분 변수로 코딩되어 있다. 독립변수는 사회적 지지로서 유형 측면에서는 물질적 지지(“물질적 지원을 받는다”), 정보적 지지(“취업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정서적 지지(“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등이며 리커트 4점 척도이고, 신뢰도는 알파계수 .92이다. 제공자 측면에서는 부모, 친구, 학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물질, 정보, 정서적 지지를 묻는 12개 문항이며, 리커트 4점 척도이고, 신뢰도는 알파계수 .91이다. 집단 구분 변수는 성별로서 남자 청년 집단과 여자 청년 집단으로 구분한다. 각 문항은 척도별로 합산하여 평균을 사용했고, 점수가 높을수록 평균이 높다.

4. 자료분석 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첫째,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량을 분석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영모형으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중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시행한다. 셋째,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주는 영향을 추정된 중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시행한다. 넷째,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각 단계에서 남·여 집단의 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통제된 모형의 적합도와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우월한 적합도를 가진 모형을 채택한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위해서는 IBM SPSS 22.0을 사용했고,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위해서는 AMOS 25.0을 사용했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되는 9개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남자 청년 집단과 여자 청년집단으로 나눠서 <표 3>과 <표 4>에 제시했다.

<표 3> 남자청년집단의 상관분석결과(N=1,074)

	1	2	3	4	5	6	7	8
1	1.00							
2	-.15**	1.00						
3	-.09*	.08*	1.00					
4	.01	.02	.04	1.00				
5	-.07*	.03	.02	.27**	1.00			
6	-.11*	.14**	.05	-0.02	0.03	1.00		
7	-.12**	.09*	-.03	0.07	.08*	-0.01	1.00	
8	-.31**	.17**	-.08*	.08**	-0.01	-.41**	-0.06	1.00
M	1.26	4.02	.45	26.23	.39	.41	.15	2.12
SD	0.40	0.73	-	4.69	-	-	-	0.32

* 변수명: 1=우울, 2=사회활동, 3=대학진학여부, 4=연령, 5=부모와 동거, 6=취업지위, 7=결혼여부, 8=사회적지지

남자 청년집단의 연구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은 사회적 지지와 가장 큰 부적 상관이 있고($r=-.31, p<.01$), 사회활동은 사회적 지지와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였다($r=.17, p<.01$). 또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남자 청년집단의 우울($M=1.26, SD=.40$)은 낮은 수준이었고, 사회활동 수준($M=4.02, SD=.73$)은 높은 수준이었다.

〈표 4〉 여자청년집단의 상관분석결과(N=967)

	1	2	3	4	5	6	7	8
1	1.00							
2	-.19**	1.00						
3	-.09*	.15**	1.00					
4	-.03	.07*	.07*	1.00				
5	-.16**	.08**	-.05	.26**	1.00			
6	-.13*	.09**	.07*	.06*	.08*	1.00		
7	-.05	.03	-0.02	0.06	0.01	.17**	1.00	
8	-.29**	.34**	-.08*	-.07*	-.07*	.54**	-.14**	1.00
M	2.33	3.04	.47	26.19	.49	.40	.14	2.23
SD	0.48	0.75	-	4.69	-	-	-	0.42

* 변수명: 1=우울, 2=사회활동, 3=대학진학여부, 4=연령, 5=부모와 동거, 6=취업지위, 7=결혼여부, 8=사회적지지

여성 청년집단의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감은 사회적 지지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이 있었고($r=-.29, p<.01$), 사회활동은 사회적 지지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r=.34, p<.01$).

2.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의 성차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의 성차를 규명하기 위해서 남녀 청년집단 간 ①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제약모형, ②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구조 동일성 제약모형, ③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자유모형 등 경쟁모형을 구성했다. 각 모형은 남녀 청년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표 5〉에는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5〉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완전 동일성	562.09	26	.08	.83	.82	.81
② 구조 동일성	132.98	21	.06	.89	.90	.89
③ 자유추정	43.32	13	.04	.97	.97	.95
$\Delta(③-②)$	89.66	8	.02	.08	.07	.06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고($\chi^2=562.09$, $df=26$, $RMSEA=.08$, $CFI=.82$, $NFI=.82$, $TLI=.81$), 구조동일성 모형은 적합도가 다소 개선되었다($\chi^2=132.98$, $df=21$, $RMSEA=.06$, $CFI=.89$, $NFI=.90$, $TLI=.89$). 마지막으로 자유추정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고($\chi^2=43.32$, $df=13$, $RMSEA=.04$, $CFI=.97$, $NFI=.97$, $TLI=.95$), 구조동일성 모형과 위계적 카이제곱 검증결과 유의미하게 적합도를 개선했다($\Delta\chi^2=43.32$, $\Delta df=13$, $p<.001$, $\Delta RMSEA=.04$, $\Delta CFI=.08$, $\Delta NFI=.07$, $\Delta TLI=.06$). 이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지가 남녀 청년의 팬데믹 기간 우울감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표 6〉에는 남녀 집단의 자유추정모형 모수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표 6〉 자유추정모형의 모수추정치 남녀 집단 비교(N=2,041)

남자 청년 집단 (n=1074)					여자 청년 집단(n=967)				
경로	추정치	SE	CR		경로	추정치	SE	CR	
우울 ← 대학 진학	.08	.05	1.11		우울 ← 대학 진학	.10	.90	1.02	
우울 ← 나이	-.01	.01	1.01		우울 ← 나이	.02	.01	1.86	
우울 ← 가족 동거	-.10	.01	1.12		우울 ← 가족 동거	-.18	.01	3.02**	
우울 ← 취업지위	-.29	.01	3.11**		우울 ← 취업지위	-.15	.02	2.16*	
우울 ← 결혼 여부	-.13	.01	2.32*		우울 ← 결혼 여부	-.10	.03	1.88	
사회활동 ← 대학 진학	.27	.02	3.65**		사회활동 ← 대학 진학	.21	.02	3.10**	
사회활동 ← 나이	.18	.01	2.90**		사회활동 ← 나이	.16	.01	2.69**	
사회활동 ← 가족 동거	.09	.02	1.20		사회활동 ← 가족 동거	.10	.02	1.31	
사회활동 ← 취업지위	.45	.03	4.70***		사회활동 ← 취업지위	.41	.09	3.12**	
사회활동 ← 결혼 여부	.20	.02	4.04***		사회활동 ← 결혼 여부	.10	.02	2.34*	
우울 ← 사회적지지	-.17	.02	9.08***		우울 ← 사회적지지	-.24	.02	12.59***	
사회활동 ← 사회적지지	.24	.05	6.46***		사회활동 ← 사회적지지	.38	.03	12.83***	

* $p<.05$, ** $p<.01$, *** $p<.001$

〈표 6〉을 살펴보면 통제변수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제거한 이후에도 사회적 지지는 청년의 우울과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먼저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대해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여성 청년 집단에 주는 감소효과($\gamma = -.24, p < .001$)가 남성 청년집단에 주는 감소효과($\gamma = -.17, p < .001$)보다 크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사회활동에 주는 긍정적 효과 역시 여성집단($\gamma = .38, p < .001$)이 남성집단($\gamma = .24, p < .001$)에 비해서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청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3.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이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의 성차

사회적 지지의 유형(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지지)이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에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남녀 청년 집단 간 ①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제약모형, ②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구조 동일성 제약모형, ③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자유모형 등 경쟁모형을 구성했다. 각 모형은 남녀 청년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표 7〉에는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7〉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완전 동일성	543.78	45	.09	.82	.83	.82
② 구조 동일성	78.92	30	.07	.87	.88	.88
③ 자유추정	27.87	25	.05	.94	.93	.93
$\Delta(③-②)$	51.05	5	.02	.07	.05	.05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고($\chi^2 = 543.78, df = 45, RMSEA = .09, CFI = .82, NFI = .83, TLI = .82$), 구조동일성 모형은 적합도가 다소 개선되었다($\chi^2 = 78.92, df = 30, RMSEA = .07, CFI = .87,$

$NFI=.88$, $TLI=.88$). 마지막으로 자유추정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고($\chi^2=27.87$, $df=25$, $RMSEA=.05$, $CFI=.94$, $NFI=.93$, $TLI=.93$), 구조동일성 모형과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결과 유의미하게 적합도를 개선했다($\Delta\chi^2=51.05$, $\Delta df=5$, $\Delta RMSEA=.02$, $\Delta CFI=.07$, $\Delta NFI=.05$, $\Delta TLI=.05$). 이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남녀 청년의 팬데믹 기간 우울감과 사회적 활동에 주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표 8>에는 남녀집단의 자유추정모형 모수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표 8> 자유추정모형의 모수추정치 남녀 집단 비교(N=2,041)

남자 청년 집단(n=1,074)					여자 청년 집단(n=967)				
경로		추정치	SE	CR	경로		추정치	SE	CR
우울	← 정보지지	-.05	.02	1.22	우울	← 정보지지	-.12	.01	2.47*
사회활동	← 정보지지	.14	.02	3.48**	사회활동	← 정보지지	.21	.02	4.99***
우울	← 정서지지	-.11	.02	2.17*	우울	← 정서지지	-.28	.02	5.07***
사회활동	← 정서지지	.14	.03	3.88**	사회활동	← 정서지지	.32	.02	8.03***
우울	← 물질지지	-.11	.02	2.11*	우울	← 물질지지	-.14	.02	2.59*
사회활동	← 물질지지	.05	.02	1.06	사회활동	← 물질지지	.20	.03	3.13**

* $p<.05$, ** $p<.01$, *** $p<.001$

<표 8>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은 여성 청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남성 청년집단보다 높았다. 정보적 지지는 남성 청년집단의 우울감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으나, 여성 청년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감소효과가 있었다($\gamma=-.12$, $p<.05$). 정보적 지지가 사회활동에 주는 긍정적 효과는 남성집단($\gamma=.14$, $p<.01$)과 여성집단($\gamma=.21$, $p<.001$) 모두에서 유의미했고, 여성집단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높았다. 정서적 지지는 남성집단과 여성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우울을 감소시켰는데, 여성집단에서 감소효과가 더 높았다($\gamma=-.28$, $p<.001$). 정서적 지지가 사회활동에 주는 긍정적 영향 역시 남성 청년 집단과 여성 청년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했는데, 여성집단에서 긍정적 효과가 더 높았다($\gamma=.32$, $p<.001$).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이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활동에 끼치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성차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3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4. 지지의 제공자가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의 성차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학교, 가족, 친구, 공공기관)가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우울과 사회참여 활동에 끼치는 영향에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남녀 청년집단 간 ①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완전 동일성 제약모형, ② 구조모수만 동일하게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한 구조 동일성 제약모형, ③ 구조모수와 측정모수를 모두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허용한 자유모형 등 경쟁모형을 구성했다. 각 모형은 남녀 청년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표 9>에는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가 제시되어 있다.

<표 9>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완전 동일성	651.37	54	.08	.85	.84	.84
② 구조 동일성	82.60	36	.06	.87	.88	.88
③ 자유추정	55.09	27	.04	.95	.94	.94
$\Delta(③-②)$	27.51	9	.02	.08	.06	.06

자유추정모형이 가장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므로($\chi^2=55.09$, $df=27$, $RMSEA=.04$, $CFI=.95$, $NFI=.94$, $TLI=.94$), 모수추정치들 남녀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 10>에 제시했다.

<표 10> 자유추정모형의 모수추정치 남녀 집단 비교(N=2,041)

남자 청년 집단(n=1,074)					여자 청년 집단(n=967)				
경로	추정치	SE	CR		경로	추정치	SE	CR	
우울 ← 학교지지	.01	.31	.04		우울 ← 학교지지	.05	.47	1.17	
우울 ← 가족지지	-.02	.31	.45		우울 ← 가족지지	-.15	.04	-2.48*	
우울 ← 친구지지	-.04	.52	-.80		우울 ← 친구지지	-.16	.06	-2.66*	
우울 ← 공공지지	-.15	1.1	4.04***		우울 ← 공공지지	.05	.55	1.27	
사회활동 ← 학교지지	-.04	.62	-.97		사회활동 ← 학교지지	.02	.71	.51	
사회활동 ← 가족지지	-.06	.60	-1.34		사회활동 ← 가족지지	.10	.09	2.56*	
사회활동 ← 친구지지	.11	.20	3.90**		사회활동 ← 친구지지	.11	.30	3.68**	
사회활동 ← 공공지지	-.01	.95	-.16		사회활동 ← 공공지지	.01	.83	.02	

* $p<.05$, ** $p<.01$, *** $p<.001$

〈표 10〉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제공자에 따라서 남녀 집단의 우울과 사회적 활동에 끼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남성집단의 우울에는 공공지지가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gamma=.17, p<.001$), 여성집단의 우울에는 가족지지($\gamma=-.15, p<.05$)와 친구지지($\gamma=-.16, p<.05$)가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남성집단의 사회활동에는 친구지지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gamma=.11, p<.01$), 여성집단의 사회활동에는 가족지지($\gamma=.10, p<.05$)와 친구지지($\gamma=.11, p<.01$)가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지지 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팬데믹 기간 남녀 청년집단의 우울과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4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팬데믹 기간 남녀 청년들의 우울에 주는 영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대해 유의미하게 감소효과가 있고, 여성집단에 주는 효과가 더 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여성집단의 사회활동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이 청년들의 우울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집단별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 청년집단에 주는 감소효과가 더 크다. 넷째,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지지가 여성집단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유형이 우울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집단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주는 우울 감소효과가 크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유형이 사회활동에 주는 영향에는 남녀 청년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집단의 경우 친구지지가 주는 긍정적 효과만이 유의미하지만 여성집단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주는 긍정적 효과가 유의미하다.

이러한 결론이 주는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 기간 다수의 국민이 우울과 불안을 느끼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었는데, 사회적 지지는 우울감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신예슬과 박수현(2022)이

팬데믹 기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Guo와 동료들(2021)이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 지지 제공자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규명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제공자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영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협업하여 시스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지 역시 남성집단에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고립된 청년의 경우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부족하다. 이는 팬데믹 이전에서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이미 사회문제화 되었고, 팬데믹 기간에 더욱 심화했다. 정부와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 등이 연대하여 소외된 청년들에게 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지지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위 청년배당, 청년일자리, 청년주택 등 다양한 청년관련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홍보되기 위해서는 복지전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이지은·한인정·김교성, 2023). 공적 지지가 여성집단에게 주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데, 이는 여성들의 경우 공공기관보다는 친구, 가족과 같은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적지지 체제 설계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 중 정보적 지지는 남성과 여성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여성청년에 대해서는 우울의 감소효과도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신종 감염병으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했는데, 특히 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한 청년세대에는 정보적 지지가 주는 효과가 크다(Springer, Menzel, & Zieger, 2020). 정보적 지지는 상황판단, 의사결정 등이 필요할 때 주변 인물이나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는데(Boberg et al., 2003), 팬데믹 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학업, 취업, 인간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느낀 여성 청년들에게 정보적 지지의 효과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정서적 지지는 여성 청년들의 우울감에 가장 큰 예방효과를 보였고, 사회활동에는 가장 큰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정서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성차는 선행연구들에서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결과(김효정·이승연·노경란, 2014)와 배경 변인을 통제하면 유의미한 성차가 없다는(Day & Livingston, 2003) 엇갈리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볼 때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특히 가족과 친구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가 우울에 대해서는 예방효과, 사회참여에 대해서는 촉진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력, 결혼, 취업 등 관련된 배경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여성 청년들의 가족과 친구와의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정서적 지지가 부족한 청년에 대해서는 관련 공공기관, 복지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혜은·정태욱, 2021; Ilhan, Ahmet, & Metin, 2021).

본 연구는 팬데믹 기간 청년들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확인하는 전국단위 표집을 통해 구축된 청년경제사회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적 지지가 우울과 사회참여에 주는 영향을 규명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우울예방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을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험설계를 통해 규명한 것이 아니어서 인과관계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사회적 지지가 청년심리에 주는 다양한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가지는 영향력과 성차를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 더 많은 통제변수의 영향을 통제하는 실험설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윤경(2021). “청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9권 제1호. 60-89.
- 김미숙·강선경(2021). “COVID-19 대유행이 청년세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명연구. 제60권. 133-153.
- 김재희·김현경(2017). “학령후기의 의도적 통제가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사회적 기술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 효과와 성차.” 인간발달연구. 제24권 제3호. 37-56.
- 김혜정·최영기(2020). “항공서비스학과 전공학생의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ourism Research. 제45권 제3호. 125-146.
- 김효정·이승연·노경란(2014).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9권 제4호. 339-359.
- 박은하(2018). “취약 청소년·청년의 진로·직업역량 현황과 자립지원정책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5권 제10호. 299-319.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점모(2015). 사회적 지지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4호. 49-70.
- 배정희(2022). “코로나19 전후 청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우울 변화와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제53권 제4호. 121-146.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582에서 2023.8.27. 인출.
- 비즈니스 포스트(2023.5.15.). “‘내년 합계출산율 0.7명’, 국회도서관 저출산 현황·대책 정리한 서적 발간.”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5216에서 2023.8.27. 인출.
- 서연주(2019). “N포세대의 감정 풍속도.” 대중서사연구. 제25권 제1호. 55-85.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2021).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층 이행경로 영향 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2020-2.
- 성보현·최은희·남윤명·조진희·홍성호(2021). “청년연구자 역량 강화지원 사업의 성과와 과제(2019~2021년).” 충북경제 Focus. 1-25.

- 손보영·윤민지·박소현·임제희(2013).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 다중역할계
획태도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일의 의미의 매개효과: 남녀차이를 중
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4권 제2호. 1189-1208.
- 송호관(2022). 사회적 지지를 통한 초등학생의 긍정적 자기인식 탐색: 포토보이스
연구방법론 활용. *초등교육연구*. 제35권 제1호. 77-100.
- 신예슬·박수현(2022). “대면 및 비대면 접촉 빈도가 20대의 코로나 우울에 이르는
경로 탐색: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7권 제4
호. 589-607.
- 엄태완·강명진·최정순(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과 사
회적 지지: 성차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22권. 5-30.
- 유민상·신동훈·이민정(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지은·한인정·김교성(2023).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에 대한 고찰 : 청년 생태
활동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78호. 57-96.
- 이혜은·정태욱(2021). 비대면 학습상황에서 학업소진과 학습몰입의 관계 정서적
지지와 메타인지전략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641-663.
- 이희정·이현(2022). “청년의 아노미와 사회적 지지 수준의 잠재집단 구분과 집단
간 자살생각 유무의 차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73권. 231-250.
- 장휘숙(2010). “청년기 발달과업 성취가 청소년의 5요인 성격특성과 자기존중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23권 제2호. 1-17.
- 정근하·노영희(2022).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출현 배경 연구.” *한국비교정부
학보*. 제26권 제1호. 229-250.
- 정주호·한연수·김동욱·조민호(2022). “코로나19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유형화 연구: 잠재집단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32권 제4호.
1-32.
- 조영오(2020). “청소년범죄자의 비행요인에 있어서의 성별 간 차이.” *치안정책연
구*. 제34권 제1호. 5-38.
- 주유선(2020). *청년의 사회적 지지*. 보건복지포럼. 제284호. 59-68.
- 최아영(2022).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계층이동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사회참여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4호.
326-346.
- 최영순(2021). “코로나블루, 팬데믹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FUTURE
MEDICINE & HUMANITIES*. 제4권 제1호. 75-92.

- 최해연·최현아(2022). “코로나19 팬데믹 스트레스의 이해와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4권 제2호. 643-664.
- 통계청(2022).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90106000000&bid=12316&act=view&list_no=418667에서 2023.8.27. 인출.
- 황지현·채정호(2017). “우울장애 환자의 자살사고에 우울, 낙관성과 감사성향이 미치는 영향.” *우울조울병*. 제15권 제3호. 123-129.
- Alsubaie, M. M., Stain, H. J., Webster, L. A. D., & Wadman, R.(2019). The role of sources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for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4(4), 484-496.
- Boberg, E. W., Gustafson, D. H., Hawkins, R. P., Offord, K. P., Koch, C., Wen, K., Kreutz, K., & Salner, A.(2003). Assessing the unmet information, support and care delivery needs of men with prostate cancer.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49(3), 233-242.
- Brougham, R. R., Zail, C. M., Mendoza, C. M., & Miller, J. R.(2009). Stress, Sex Difference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College Students. *Curr Psychol.*, 28, 85-97.
- Camara, M., Bacigalupe, G., & Padilla, P.(2017).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are you helping me or stressing me out?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22(2), 123-136.
- Chen, F., Zheng, D., Liu, J., Gong, Y., Guan, Z, & Lou, D.(2020).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adolescents during COVID-19: A cross-sectional study. *Brain Behav Immun.*, 88, 36-38.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3.
-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hen, S., & Syme, S. L.(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 Day, A. L., & Livingstone, H. A.(2003). Gender differences in

- perceptions of stressors and utilization of social support among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35(2), 73-83.
- Farboodi, M., Jarosch, G., & Shimer, R.(2021). Internal and external effects of social distancing in a pandemic.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6. <https://doi.org/10.1016/j.jet.2021.105293>.
- Flaherty, J., & Richman, J.(1989).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social support: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an empirical test. *Social Science & Medicine*, 28(12), 1221-1228.
- Fusilier, M. R., Ganster, D. C., & Mayes, B. T.(1986). The social support and health relationship: Is there a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9(2), 145-153.
- Graves, B. S., Hall, M. E., Dias-Karch, C., Haischer, M. H., & Apter, C.(2021).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stress and coping among college students. *PLoS ONE*, 16(8), e0255634.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55634>
- Grey, I., Arora, T., Thomas, J., Saneh, A., Tohme, P., & Abi-Habib, R.(2020). The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leep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sychiatry Research*, 293, <https://doi.org/10.1016/j.psychres.2020.113452>.
- Guo, K., Zhang, X., Bai, S., Minhat, H. S., Nazan, A. I. N. M., Feng, J., & Saliluddin, S.(2021). Assessing social support impact on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Shaanxi provi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f China. *PLoS One*, 16(7), e0253891.
- Hann, D., Baker, F., Denniston, M., Gesme, D., Reding, D., Flynn, T., Kennedy, J., & Kieltyka, R. L.(2002).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ve symptoms in cancer patients: Ag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2(5), 279-283.
- Heaney, C. A., & Israel, B. A.(2008).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K. Glanz, B. K. Rimer, & K. Viswanath,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189-210)*. San Francisco, CA: Wiley & Sons.

- Horton, R.(2021). *The COVID-19 catastrophe: What's gone wrong and how to stop it happening again*. MA: John Wiley & Sons.
- House, J.(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 Howell, S., Hall, W., & Geelan, D.(2023). Exploring the Perspectives of Engineering Undergraduates on Employability and Employability Building Activities. *Higher Education, Skills and Work-based Learning*, 13(1), 161-178.
- Hurd, N. M., Albright, J., Wittrup, A., Negrete, A., & Billingsley, J.(2018). Appraisal Support from Natural Mentors, Self-worth, and Psychological Distress: Examining the Experiences of Underrepresented Students Transitioning Through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7, 1100-1112.
- Iihan, C., Ahmet, T., & Metin, B.(2021). Psychological Inflexibility Predicts Depression and Anxiety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n Educational Psychology*, 15(1), 11-24.
- Jagers, R. J., Rivas-Drake, D., & Williams, B.(2019). Transformative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Toward SEL in Service of Educational Equity and Excellence. *Educational Psychologist*, 54(3), 162-184.
- Li, F., Luo, S., Mu, W., Li, Y., Ye, L., Zheng, X., Xu, B., Ding, Y., Ling, P., Zhou, M., & Chen, X.(2021). Effects of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on the mental health of different age group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MC Psychiatry*, 21, 1-14.
- Lisitsa, E., Benjamin, K. S., Chun, S. K., Skalisky, J., Hammond, L. E., & Mezulis, A. H.(2020). LONELINESS AMONG YOUNG ADULTS DURING COVID-19 PANDEMIC: THE MEDIATIONAL ROLES OF SOCIAL MEDIA USE AND SOCIAL SUPPORT SEEK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9(8), <https://doi.org/10.1521/jscp.2020.39.8.708>
- Mayseless, O., & Keren, E.(2014). Finding a Meaningful Life as a Developmental Task in Emerging Adulthood: The Domains of Love and Work Across Cultures. *Emerging Adulthood*, 2(1), 63-73.

- Reblin, M., Uchino, B. N.(2008).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and its implication for health.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21(2): 201-5.
- Reis, H. T., Lin, Y.-c., Bennett, M. E., & Nezlek, J. B. (1993). Change and consistency in social participation during early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33-645.
- Sandler, I. N., Miller, P., Short, J., & Wolchik, S. A. (1989).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for children in stress.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 277-307). CA: John Wiley & Sons.
- Springer, S., Menzel, L. M., & Zieger, M. (2020). Google Trends provides a tool to monitor population concerns and information needs during COVID-19 pandemic. *Brain, Behavior, and Immunity*, 87, 109-110.
- Taylor, S. E. (2011). Social support: A review. In H. S. Friedman (Ed.), *The Oxford handbook of health psychology* (pp. 189-214). Oxford University Press.
- Ustun G. (2021). Determining depression and related factors in a society affected by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7(1), 54-63.
- Volk, A. A., Brazil, K. J., Franklin-Luther, P., Dane, A. V., & Vaillancourt, T. (2021). The influence of demographics and personality on COVID-19 coping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8, 511-514.

Abstract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in young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ung, Byongs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2021, when social distancing was implement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in the impact.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applied to the data of the 2021 Youth Socio-Economy. A total of 2,041 data were analyzed, with 1,074 men and 967 women, the dependent variables being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the control variables being educational background, age, marriage, and family residence, and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being the subtype of social support and the type of support provider. The underlying model was constrained to estimate the parameters of the male and female groups equally, and the alternative model was freely estimated. As a resul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nd social participation. Overall, the impact on female youth groups was even greater, and in particular, the positive effect of emotional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on women was greater.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design policies that contribute to reducing depression and promoting social participation in future distancing.

Keywords : gender difference, depression, social participation, pandemic, covid19, young adults

* Professor,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궤적 분석: 성 역할 가치관을 중심으로

황지선*·민현주**·정민철***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유형화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생애 사건에 따른 통합적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문화 심리적 요인인 성 역할 가치관이 여성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KLoVF)의 1차~8차까지 14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고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s)의 방법을 적용하여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집단별 최적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의미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다항 로짓 모델을 적용하여 성 역할 가치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은 '노동시장 지속이탈형', '중기 일시정규직 진입형', '후기 정규직 진입형', '비정규직 이탈형', '내 사업 이탈형', '정규직 이탈형' 6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본 분석 유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장기간 지속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기혼여성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중·후반부에 전격적으로 정규직 임금 일자리에 진입하는 독특한 특성의 유형이 추세로 분석되었다. 셋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의 결정요인으로 연령, 학력, 가구소득, 출산 여부, 자녀 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성 역할 가치관의 영향력 역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궤적의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 사회의 평등적 성 역할 가치관과 여성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성 역할 가치관, 여성 노동시장, 기혼여성, 집단중심추세모형,
여성가족패널조사

* 제1저자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cals100@kyonggi.ac.kr)
** 교신저자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newrules@kyonggi.ac.kr)
*** 공동저자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bluegreen0807@naver.com)

I. 서론

여성 노동시장 이행궤적은 복잡하고 다양한 직업 사회학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민현주, 2012). 최근 우리 사회의 여성 노동시장 이행궤적의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크게 확대되었지만, 결혼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사적 요인과 노동시장 지위와 같은 일자리 특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력을 발전시키는 데 저해가 되는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M자형 여성 노동시장 참여의 생애주기 패턴은 1980년대에 이미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에서 사라진 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최근 코호트에서는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이 평생 지속적인 고용과 육아를 결합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종종 지속적인 고용과 육아 사이에서 냉혹한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 M자형 곡선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다(Brinton & Oh, 2019).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가 다양한 각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는데, 여성 노동시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에 관해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 논의 핵심에 결혼과 출산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최은영·곽현주, 2015). 또한, 여성의 생애 사건인 결혼과 출산의 결정이야말로 이후 노동시장 이행 결정과 맞물려 있고, 여성의 경력을 유지하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시간적 흐름에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작용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김정호, 2009; 윤자영, 2016; Becker, 1981; Keeley, 1977; Oppenheimer, 1997; South, 2001), 최근 여성의 활발한 사회 활동과 함께 노동시장 이행 결정에 관한 더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요소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 내 성 역할 가치관에 주목한다. 개인의 진로 구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므로, 진로를 선택하는 노동시장 이행의 의사결정에 개인의 인식이나 가치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최은영·곽현주, 2015). 과거에는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일지라도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을 수용하여 일보다는 결혼과 육아를 우선시하였지만, 이제는 여성들의 장기적인 경력지향이 높아짐에 따라 일을 우선시하여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Brinton & Oh, 2019).

이렇듯 생애주기에서 결혼과 출산을 겪는 기혼여성이 노동시장 이행과 복귀, 또는 이탈을 선택할 때 이들이 속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 못지않게 성 역할 가치관이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윤미례·김태일, 2016). 그러나 이러한 성 역할 가치관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결혼의향, 출산계획, 삶의 만족, 우울, 갈등 등을 다룬 것들이 다수이고(이진숙·최원석, 2011; 전해영, 2020; 진미정·정혜은, 2010),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성 역할 가치관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여성 노동시장 이행궤적의 분석대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또는 종사상 지위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진로구성에서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 역할로 비임금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시간이 자유로운 특수근로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사상 지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정지애, 2019). 특히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정책들은 주로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중규모 이상의 사업체 중심으로 가족 친화 정책이나 고용보험에 근거한 육아 휴직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대상이 제한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박찬웅·조선미·김노을, 2018; 오은진·김소연, 2021). 이러한 배경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나 종사상 지위의 분석이 여성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앞서 문제 제기한 우리나라 여성의 독특한 M자형 고용률의 특징은 횡단면적인 관찰 결과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의 통계 현황으로 볼 때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통계청, 2022), 특정 시점의 인구학적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여성 개인의 중요한 생애 사건인 결혼과 출산의 결정과 함께 노동시장 이행 의사결정에 따라 어떤 궤적으로 발현되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는 경력단절 현상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지만,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어떤 영향요인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 어떤 경로로, 그리고 특히 어떤 유형에 속하여 진로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밝혀낸다면 여성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의 1차~ 8차 조사의 14년간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s)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집단별 최적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의

미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다항 로짓 모델(multinomial logit model)을 적용하여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사회문화 심리적 요인인 성 역할 가치관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둘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별 특징은 어떠한가? 셋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별 결정요인은 무엇이고 특히 성 역할 가치관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1. 기혼여성의 성 역할 가치관과 노동시장 이행

성 역할에 관한 정의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부여되어 확인된 성별에 따라 적절한 행동과 자질을 기대하는 공유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Eagly, 2013). 가치관은 일종의 태도로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인지적으로는 판단 기준을 정하고 정서적으로는 느낌을 통해 행동적인 측면의 조화를 통합한 가치체계이며, 그 구체적인 발현은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표출된다고 하였다(정호범, 2013). 따라서 개인은 의사결정을 할 때 또는 행동을 취할 때 가치관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일반적으로 성 역할 가치관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남성, 여성의 구분에 따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성 역할 가치관은 사회적 젠더 평등 수준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적인 사회문화 심리적 특성으로 형성되어 평등주의(egalitarianism) 성 역할 가치관을 갖거나 전통적인(traditionalism) 성 역할 가치관을 갖게 된다. Becker(1991)의 성 역할 사회화이론에 따라 여성의 경우 성장기에 사회적으로 학습한 성 역할 인식에 대한 태도가 이후 성인기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대한 태도에 반영되고, 성인기에 평등주의 성 역할 가치관을 가진 여성은 전통적인 성 역할 가치관을 가진 여성보다 노동시장 참여에 더 적극적이며 더 큰 성과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tickney & Konrad, 2007).

최근 우리 사회는 가족 중심주의의 쇠퇴와 함께 성 역할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비교적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성 역할 분리의 입장인 전통적

인 가치관은 점차 약화되고, 평등주의 가치관을 갖거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성 역할을 통합적으로 말아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지영, 2022). 가족과 관련된 성 역할 분담의 가치관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저출산, 만혼화와 같은 사회경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동시에, 성 역할 가치관이 다시 여성의 결혼과 출산 결정과 같은 인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의 예로 미혼 남녀의 결혼의 향에는 인구 사회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성 분업적 역할 가치관이 자녀 수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삼식, 2006).

사회의 젠더 정책 레짐(gender-policy regime)에 따라 여성 노동시장의 참여 기회나 자원의 배분에 있어 성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의 젠더 평등 수준이 높다면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개인도 평등주의 성 역할 가치관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김영미·류연규, 2013).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은 여성 개인의 성 역할 가치관이 노동시장 이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 노동시장 이행 변화 유형을 이해하는 데 큰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만혼화와 저출산의 현상은 2005년 이후에 국가적인 관심을 받게 되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은기수, 2005). 여성의 생애 사건인 결혼과 출산을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해보면, 결혼의 경우 학력, 소득, 노동시장 지위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출산의 경우 역시 유사하게 학력, 소득, 노동시장 지위, 초혼 시기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다은·유계숙, 2011). 서구사회에서도 여성들의 고학력화는 만혼화와 관련이 있으며(South, 2001), 국내의 경우 남성과 비교하여 더욱 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부, 2010). 이는 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매력과 필요성 감소를 의미하고 과거만큼 결혼할만한 상대를 찾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워졌으며, 시기적으로 여성의 긴 학업 기간만큼 결혼과 출산 시기와 양립할 수 없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여성의 소득과 노동시장 지위는 결혼과 출산의 결정에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일종의 지참금 역할을 하여 결혼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견해와 여성 자신이 결혼으로 인

한 경제적인 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결혼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변용찬, 2010).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역시 결혼과 출산 결정의 중요한 예측변수이지만(Becker, 1981), 여성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반드시 결혼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결혼 시기를 늦추게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은 결혼과 출산의 결정을 경제적 독립성보다는 성 역할 분업 가치관의 변화로 이해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상대적 결혼의 이득을 성 역할 전문화와 교환의 결과로 보는 결혼모델에 기초하고 있다(Oppenheimer, 1997).

여성의 연령대는 최근 코호트일수록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학력이라는 인적자본 요소 역시 노동시장 복귀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경, 2004). 서구사회에서도 젊은 코호트의 경우 출산 이후 노동시장 복귀에 대한 열망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에 성인기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열망을 가지게 된 여성들이 첫 출산 후 이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Desai & Waite, 1991). 여성의 자녀 수도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때 자녀 수와 가구원 수는 돌봄 노동의 수요 및 공급과 관련이 되는데,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해당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형태는 다소 천천히 이탈하는 지연된 경력단절 형태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하는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최인선·이소영, 2022).

한편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임금은 학력과 경력이 반영된 결과변수로서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윤미례·김태일, 2016).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 요소에 관한 영향력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고학력의 여성일수록 투자된 인적자본의 크기가 크므로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분석과 함께(김지경·조유현, 2003), 고학력 여성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탈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다(박수미, 2002).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구사회에서 최근 코호트에서 배우자 소득에 따른 소득 효과는 적어지고 있고, 국내연구에서도 배우자 소득의 유의미한 영향이 일관되게 검증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Wenk & Garrett, 1992; 윤미례·김태일, 2016).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여성의 결혼과 출산 결정은 학력, 소득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과 노동시장 지위와 같은 요인, 일·가정 양립제도와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 그리고 성 역할 가치관과 같은 사회문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결정에도 연령대, 결혼과 출산 여부, 자녀 수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학

력, 소득 수준과 같은 인적자본 특성, 임금, 노동시장 지위, 직종과 같은 일자리 특성, 일·가정 양립제도와 같은 제도적 특성, 그리고 가정 내 성 역할 분업 가치관과 같은 사회문화 심리적 특성 등이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이렇듯 여성의 결혼과 출산의 결정요인은 연쇄적으로 여성 노동시장 이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성 노동시장 이행궤적은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요인 중 연령, 지역, 학력, 가구소득, 출산 여부, 자녀 수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정하고 특히 성 역할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한다.

3. 여성 노동시장 이행궤적의 동태적 분석

앞서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 결정의 원인과 결과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주로 횡단면적인 분석으로 여성 노동시장 이행의 역동적인 변화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생애 사건을 거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성 노동시장 이행궤적의 유형을 파악하고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횡단면적인 분석으로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민현주, 2012).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하인스(Hynes)와 클락버그(Clarkberg)는 미국 여성들의 출산 시기 동안 취업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총 여섯 집단으로 유형화하였으며 두 번째 출산보다는 첫 번째 출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이 더 심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Hynes & Clarkberg, 2005).

국내연구로는 대표적으로 민현주(2012)가 여성의 취업과 미취업 사이에서 연속적인 이동을 고려하여 취업상태변화의 궤적을 집단중심추세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5개의 집단유형을 도출하였고, 최근 코호트의 고학력 집단에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며, 출산 시기의 조절이 일자리 연속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형화 비교를 해보면, 미국에서는 출산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였다가 출산 후 빠른 기간 이내에 다시 재진입하는 유형이 집단으로 형성되었지만(Hynes & Clarkberg, 2005), 우리나라에서는 집단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즉 국내의 여성 노동시장은 동태적으로 낮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전문적인 경력 이음이 저조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윤미례·김태일(2016)은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경로를 유형화하고 경로 유형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성 역할 인식이 경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총 다섯 가지의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실업/비경제활동 상태의 여성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여성 노동시장 전체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노동패널은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와는 달리 성 역할 가치관의 설문 을 매 회차 수집하지 않고 부가조사에서 단 한 차례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인식이 언제 형성된 것인지가 모호하다. 즉 노동시장 참여 유형과 성 역할 인식 간의 인과관계 방향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출산 후 빠른 기간 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하거나 지속하여 참여하는 집단의 성 평등 인식은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진보적으로 높은 정도로만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과 출산의 생애 사건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성 역할 가치관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출산 양육기 동안 여성의 일자리 질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관해 동태적으로 분석한 최인선·이소영(2022)의 연구는 노동시장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종사상 지위만으로 일자리 질을 서열화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인 ‘불안정 노동’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질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임금과 소득, 그리고 고용 안정성을 다면적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총 다섯 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출산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후 재진입하는 일자리는 불안정 노동을 강화하게 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연된 경력단절형’이나 ‘불안정 노동 진입형’의 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정성미(2023)의 연구는 가장 최근의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가 반영된 분석으로서 공공돌봄서비스나 육아휴직의 제도적 효과를 고려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한국노동패널 6차~23차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들의 첫출산 2년 전부터 출산 후 8년까지의 경력 유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때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출산 후 안정노동으로 조기 진입하는 집단의 경우 공공돌봄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반면에 정규직 일자리에서 출산 후 이탈하는 집단은 공공돌봄서비스와 육아휴직의 제도적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 노동시장의 해법을 정책적, 제도적 요인으로만 분석할 수 없고 가장 근원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관의 문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1차~8차까지 매 회차 성 역할 가치관을 조사한 방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유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를 활용하고 STATA 16을 사용하여 집단중심 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s)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개인용, 가구용, 일자리용 설문으로 구성되어 여성의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지위 변화와 일자리 경험,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2007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2020년 8차 조사에 걸친 최근 14년간의 패널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종단분석을 위한 최적의 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노동시장 이행 경험과 가족 관련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여성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여성의 결혼 시점부터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담은 월별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2007년 1차 조사 당시의 전후 5년 기간 내에 첫 결혼을 경험한 여성이면서 연령 코호트 1971년~1980년생으로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제한을 둔 이유는 첫째, 결혼 시점을 제한함으로써 첫 결혼 사건 전후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2007년 1차 조사부터 2020년 8차 조사까지 충분한 직업력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령 코호트를 제한한 이유는 중·고령층과 젊은 코호트를 제외하기 위한 목적인데, 중·고령층의 경우 회고에 의한 직업력 정보의 정확성이 한계가 있고, 젊은 코호트의 경우 결혼 시점 이후 직업력 추적 기간이 짧아지므로 추세 분석에서 자료의 우측절단(right censoring bias)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차 조사 시점인 2007년 당시의 여성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의 세대가 1971년~1980년생이므로, 이들이 결혼 시점 전후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추적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분석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자료는 첫 결혼 시점이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이고, 1971년~1980년생인 기혼여성 1,294명(사례 수: 5,087)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세 분석을 위한 관찰 시점은 분석대

상의 첫 결혼 시점인 연도와 월을 기준으로 -11개월부터 총 150개월까지 충분한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여성 노동시장의 경우 생애 사건인 결혼과 출산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 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취학 자녀가 생기는 시기는 여성에게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제2의 위기로 지적되기 때문이다(구슬이·정익중, 2021). 아울러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이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역동성을 갖고 있다는 점(민현주, 2012)을 고려하여, 총 150개월의 충분한 관찰 기간을 설정하였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유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1~8차까지의 직업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대상의 월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나타낼 수 있는 노동시장 지위를 사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일자리 구분(임금/비임금/특고)을 재구성하여 노동시장 지위의 서열이 반영된 1.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 2. 무급 가족 봉사, 3. 비정규직 임금 일자리, 4. 내 사업 비임금 일자리, 5. 정규직 임금 일자리로 구분하여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라 여성 노동시장 이행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지역, 학력, 가구소득, 출산 여부, 자녀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특히 성 역할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성 역할 가치관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1~8차 조사의 가족 관련 가치관을 설문한 가족 내 역할 인식 1~6번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내용으로는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 ‘여성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 평등’(역문항), ‘주부가 일하면 취학 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 ‘맞벌이 부부 가사 공평 분담해야’(역문항),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역문항), ‘집은 공동명의로 해야’(역문항)의 6개의 질문으로 ‘매우 그렇다’=1점, ‘조금 그렇다’=2점, ‘별로 그렇지 않다’=3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측정된 점수이다. 이때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성 평등 인식이 높은 평등적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측정한 점수가 낮을수록 성 평등 인식이 낮은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

3. 집단중심추세모형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살펴보고자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s)을 사용하였다. 집단중심추세모형은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단별 궤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군집을 도출하는 방법이다(Jones, Nagin, & Roeder, 2001). 기존에는 종단적으로 상태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최적 일치법을 통한 배열분석이 많이 사용됐지만, 집단 분포에 대한 명확한 검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집단중심추세분석은 최대 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집단별 궤적을 직접 추정하고 집단 수와 분포에 대한 검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열분석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법에 해당한다(Nagin, 2014). 모집단은 시간에 따른 몇 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속변수는 시점 간 상호독립이라고 가정한다. 개인의 상태에 따른 종단적 배열 확률은 아래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개인이 집단에 소속될 확률 $P^j(Y_i)$ 와 집단에 속한 개인의 다항 로지스틱 확률밀도함수 π_j 의 곱과 같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의 확률밀도함수는 매 시점의 확률밀도함수 곱집합을 의미한다(민현주·이수경, 2018).

$$P(Y_i) = \sum_i \pi_j P^j(Y_i)$$

$$P^j(Y_i) = \prod_{t=1}^T p^{jt}(y_{jt})$$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해 최적의 집단 수에 따른 함수식이 결정되면 개체별 집단에 속할 사후 확률이 도출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집단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다항 로짓 모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정적 효용(V_j)과 확률적 효용(ϵ_j)을 바탕으로 개체(i)가 범주(a)에 속할 확률 $P(y = a)$ 을 계산한 후, 기준범주(a) 대비 비교범주(b)에 속할 확률인 $\frac{P(y_i = b)}{P(y_i = a)}$ 을 통해 승산비(Odds Ratio)를 도출하게 된다(우석진, 2020).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U_j = V_j + \epsilon_j$$

$$P(y = a) = \frac{e^{V_a}}{e^{V_a} + e^{V_b} + e^{V_c}}$$
$$\frac{P(y_i = b)}{P(y_i = a)} = \frac{e^{x_i\beta_b}}{e^{x_i\beta_a}} = \exp(x_i(\beta_b - \beta_a))$$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1차~8차 조사대상 중 첫 결혼 시점이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이고, 1971년~1980년생인 기혼여성 1,294명(사례 수 5,087)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연령은 평균 32.9세이고 학력은 고졸 이하, 2~3년 초대졸, 4년제 대졸 이상이 모두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자녀 수는 평균 1.4명, 가구 소득은 평균 3,763만 원으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변수	범주	전체	
			사례수 평균	비율 표준편차
종속 변수	노동 시장 지위	실업/비경제활동상태	3,797	74.64
		무보수 가족봉사	64	1.26
		비정규직 임금일자리	239	4.70
		내사업 비임금일자리	280	5.50
		정규직 임금일자리	707	13.90
독립 변수 및 통제 변수	성역할 가치관	0. 전통적 가치관 : 6개 문항 점수의 평균값을 표준화한 점수에서 1SD(Standard Deviation) 미만의 점수를 가진 집단	3,822	75.19
		평등적 가치관 : 6개 문항 점수의 평균값을 표준화한 점수에서 1SD 이상의 점수를 가진 집단	1,261	24.81
	연령		32.9	5.10
	학력	고졸 이하	1,821	35.80
		2~3년 초대졸	1,450	28.50
		4년제 대졸 이상	1,816	35.70
	출산 여부	0. 출산경험 없음	3,778	74.27
		1. 출산경험 있음	1,309	25.73
	자녀 수		1.4	0.77
	가구소득(만 원)		3,762.9	2,334.10
	거주 지역	비수도권	3,231	63.51
		수도권	1,856	36.49

1.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화 분석결과: 집단중심추세모형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적용하여 유형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추세 분석을 위한 관찰 시점에 해당하는 가로축은 월 단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로축의 시작점 0은 분석대상의 첫 결혼 시점인 연도와 월을 기준으로 -11개월이고, 가로축의 우측은 총 150개월까지이다. 세로축은 노동시장 지위 변화(1.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 2. 무급 가족 봉사, 3. 비정규직 임금 일자리, 4. 내 사업 비임금 일자리, 5. 정규직 임금 일자리)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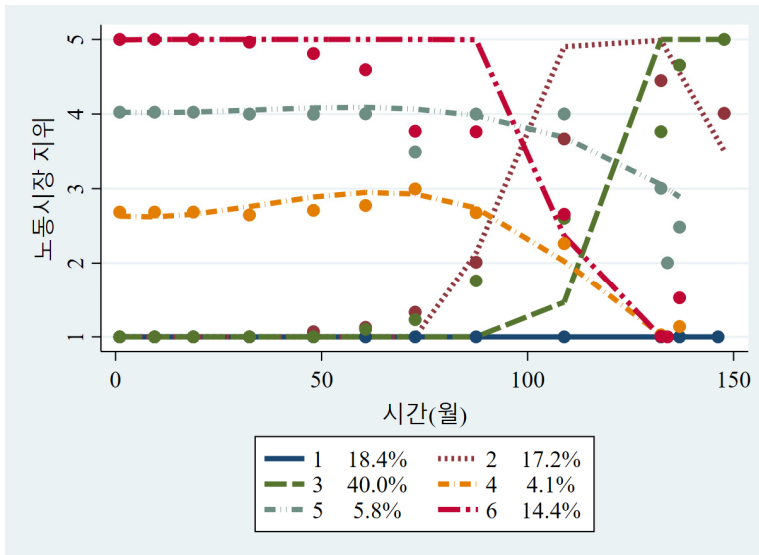
유형화 분석 과정에서 본 연구는 절단 정규분포를 가정한 3차 함수를 적용하여 집단 수를 증가시키면서 최적의 이행궤적 집단 수를 확인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6개 유형으로 설정했을 때, BIC 값이 최소화되고 $\ln(\text{BIC})$ 값 개선이 최대화되어 모형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해 잠재 집단을 도출했던 민현주·이수경(2018), 박미희·홍백의(2014), 홍성표·임한려(2020)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그림 1]에서 나타난 6개의 유형을 개념화하면 (1) '노동시장 지속이탈형'(18.4%), (2) '중기 일시정규직 진입형'(17.2%), (3) '후기 정규직 진입형'(40.0%), (4) '비정규직 이탈형'(4.1%), (5) '내 사업 이탈형'(5.8%), (6) '정규직 이탈형'(14.4%)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그림 1]을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 분석을 위한 관찰 기간인 150개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비교하여 전반부에는 노동시장 이행의 역동이 단조롭다가 관찰 기간의 중·후반 시점부터 활발한 역동이 관찰된다. 여성 노동시장에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은 당시의 영향보다는 기혼여성의 가족 내 다중역할이 가중되는 결혼 이후 6~7년 이후의 시기부터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자녀출산 전후 4년의 기간에 큰 역동성을 보여준 민현주(2012)의 분석결과와는 다른 모습인데, 이러한 이유는 민현주(2012)의 연구가 1998년부터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2000년대 이전에 결혼한 1960년대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시장 지위 변화 대신에 취업/비취업의 변화를 측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시장이 2000년대 후반부터는 다른 역동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형화된 각 집단의 특징을 분석해보면, (1) ‘노동시장 지속이탈형’(18.4%)은 결혼 전부터 계속하여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인 집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의 비중이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적은 비중으로 분석되었는데, 민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지속이탈형(51.8%)’으로, 최인선·이소영(2022)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탈형(45.4%)’으로 보고되었다. 이때 선행연구의 관찰 기간은 각각 4년, 10년 정도인데, 본 연구에서는 총 150개월의 관찰 기간으로 전반부 6~7년의 추세로 보면 노동시장 이탈 집단은 50% 이상의 비중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2) ‘중기 일시정규직 진입형’(17.2%)은 결혼 5~6년 이후에 전격적으로 정규직 임금 일자리에 진입하였다가 11년 이후에는 다시 쇠퇴하는 여성들이다. 이들과 비교하여 (3) ‘후기 정규직 진입형’(40.0%)은 조금 지연된 시기인 결혼 10년 이후에 전격적으로 정규직 임금 일자리에 진입하여 계속 유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미취학 자녀의 집중 양육 기간을 지나서 재취업에 성공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집단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선행연구를 통해 볼 수 없는 독특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민현주(2012)의 연구에서 ‘출산 후 진입형(12.5%)’이 있으나 이들은 노동시장 지위에 상관없이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이므로 본 유형과 동질적이지 않으며, 최인선·이소영(2022)의 ‘불안정노동진입형(12.9%)’이 있으나 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안정노동진입형’은 추세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윤미례·김태일(2016)의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후 복귀형(11.0%)’이 도출되었는데 복귀한 일자리의 노동시장 지위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중간 지점으로 복귀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분석결과가 다른 이유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활용한 패널 자료가 다르고 분석대상, 관찰 시점, 관찰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의 특징을 고려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 기혼여성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화 분석결과

(2) ‘중기 일시정규직 진입형’(17.2%)과 (3) ‘후기 정규직 진입형’(40.0%)은 결혼과 출산 시기에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결혼 5~6년과 10년 이후에 전격적으로 정규직 임금 일자리에 진입하는데, 먼저 진입한 (2) 유형의 여성들은 대략 2년 정도 정규직 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탈하는 반면에, 나중에 진입한 (3) 유형의 여성들은 정규직 임금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여성 노동시장 특성으로 대다수가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구성된 비정규직(66.4%)이며, 여성은 정규직으로 진입하여도 생애 사건과 역할의 영향으로 비임금 일자리나 특수고용자의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는 설명(정지애, 2019)이 이제는 힘을 잃은 증거이기도 하다.

(4) ‘비정규직 이탈형’(4.1%)은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결혼 전후로 비정규직 임금 일자리를 6~7년 유지하다가 서서히 쇠퇴하여 10~11년 이후에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여성들이다.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최인선·이소영(2022)이 ‘불안정노동유지형(17.7%)’을 제시하였고, 윤미례·김태일(2016)에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유지하는 집단이 추세로 나타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 ‘내 사업 이탈형’(5.8%)은 내 사업 비임금 일자리를 비교적 오래 유지하다가 8~9년 이후에 서서히 쇠퇴하는 추세를 보이는 집단이다. 윤미례·김태일(2016)의 연구에서도 비임금 근로를 유지하는 집단이

15.2%로 분석되었다.

(6) ‘정규직 이탈형’(14.4%)은 결혼 전후 정규직 임금 일자리를 장기간 유지하다가 7~8년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하여 10~11년 이후에는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 여성들이다. 이 유형은 추세선과는 별개로 내 사업 비임금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비정규직 임금 일자리로 소수 이동하는 관측치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이탈 현상이 두드러진다. 선행연구에서는 기혼 여성 노동시장 이탈의 변곡점을 출산 후 2~3년 이후로 보고하고 있는데(민현주, 2012; 윤미례·김태일, 2016; 최인선·이소영, 2022), 본 연구는 정규직 임금 일자리로 국한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차이가 존재한다. 정규직 임금 일자리의 기혼여성들에게 결혼 후 7~8년의 시기는 취학 자녀가 생기는 제2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구슬이·정익중, 2021), 이 시기에 그동안의 경력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아쉬움이 존재한다.

〈표 2〉 기혼여성 노동시장 이행궤적 모형적합도

집단수	BIC	ln(ΔBIC)	집단별 비율(%)						
			1	2	3	4	5	6	7
1	-3605.19	-	100.0						
2	-1801.71	7.497	74.5	25.5					
3	-1312.05	6.194	74.4	10.0	15.6				
4	-1266.96	3.809	31.0	46.9	8.9	13.3			
5	-1921.78	6.484	33.6	27.5	14.2	11.2	13.5		
6	-3605.19	7.429	18.4	17.2	40.0	4.1	5.8	14.4	
7	-1801.71	7.497	24.5	31.1	18.4	1.4	5.0	6.3	13.3

2. 유형별 결정 요인 분석: 다항 로짓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 집단별 소속확률을 추정하고자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활용하였다. 이때 종속 변수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으로 분석된 6개의 집단유형이고,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1) ‘노동시장 지속이탈형’(18.4%)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나머지 다섯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확률을 추정하였다. 여기에 성 역할 가치관, 연령, 학력, 가구소득, 거주지역, 출산 여부, 자녀 수를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다항 로짓 모형을 통한 유형 집단별 소속확률을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 역할 가치관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위와 같은 다양한 통제변수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여성 가족 패널조사의 성 역할 가치관은 1차 조사부터 8차 조사까지 매 차수 설문으로 수집한 자료로서 기존의 제약 없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추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만약 성 역할 가치관을 가장 최근 차수에 단 한 번만 측정했다면 그 가치관이 결혼과 출산 후의 노동시장 이행 결정 이전부터 갖고 있던 것인지, 아니면 출산 후 노동시장 이행 결정 이후에 형성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윤미례·김태일, 2016).

〈표 3〉 다항 로짓 모형을 통한 유형 집단별 소속확률 추정

독립변수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준거집단: (1) 노동시장 지속이탈형)				
	(2) 중기 임시정규직진 입형 (N=845)	(3) 후기 정규직 진입형 (N=1,964)	(4) 비정규직 이탈형 (N=201)	(5) 내 사업 이탈형 (N=285)	(6) 정규직 이탈형 (N=707)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계수/표준오차
성역할 가치관	0.826	0.228	1.088***	1.108***	0.991***
	0.659	0.275	0.311	0.304	0.287
연령	-0.091	-0.046*	-0.050	0.008	-0.112***
	0.070	0.023	0.030	0.029	0.026
2~3년제 초대졸	-2.304*	-0.589*	-1.564***	0.202	0.003
	1.108	0.269	0.375	0.330	0.298
4년제 대졸이상	-0.604	-0.646*	-0.103	0.364	0.321
	0.630	0.261	0.307	0.317	0.285
출산 여부	13.906	-2.686***	-3.088***	-3.125***	-2.781***
	552.950	0.380	0.438	0.433	0.401
자녀 수	0.491	0.433**	-0.525*	-0.359	-0.234
	0.449	0.168	0.217	0.204	0.185
가구소득 (로그)	0.588	-0.271	1.314***	0.817**	1.951***
	0.704	0.257	0.309	0.301	0.275
수도권 거주	-1.594*	-0.063	-0.738**	-0.486	-0.412
	0.808	0.216	0.270	0.260	0.233
상수항	-16.865	8.881***	-5.731*	-4.239	-8.943***
	552.974	1.909	2.322	2.257	2.053
Chi2	1177.31				
N	4,911				

* p<.05, ** p<.01, *** p<.001

우선 성 역할 가치관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들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평등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2) '중기 일시정규직 진입형'과 (3) '후기 정규직 진입형'에 속할 확률은 유의하지 않았고, (4) '비정규직 이탈형', (5) '내 사업 이탈형', (6) '정규직 이탈형'에 속할 확률은 유의하게 높다고 추정되었다. 이때 성 역할 가치관의 영향력이 유의한 세 유형의 공통점은 결혼 10년 전후로 노동시장 이행을 유지한 여성들이다.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생애 사건을 겪는 기간에 흔들림 없이 자신의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 역할 인식이 평등적 가치관을 가질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성 역할 가치관과 유의하지 않은 두 집단의 공통점은 결혼 초기 5~6년까지 또는 10년까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상태에 있던 여성들이다. 이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 집중 육아 시기에 노동시장 이행을 지양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 가치관을 보유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따라서 평등적 성 역할 가치관을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과 출산에 따른 초기 10년 이내까지는 노동시장 이행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기혼여성의 성 역할 가치관은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연령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분석의 대상이 1971년~1980년생이므로 큰 세대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연령대가 높을수록 (1) '노동시장 지속 이탈형'에 비해 (3) '후기 정규직 진입형'과 (6) '정규직 이탈형'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위의 두 집단을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서, 기혼여성의 높은 연령대가 정규직 임금 일자리와 관련된 두 개의 유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력의 영향력으로는 준거집단인 고졸 이하와 비교하여 2~3년제 초대졸인 경우 (2) '중기 일시정규직 진입형', (3) '후기 정규직 진입형', (4) '비정규직 이탈형'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 (3) '후기 정규직 진입형'에 속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4년제 대졸 여성보다 2~3년제 초대졸 여성들이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학력 여성들이 서구사회의 고학력 여성들과는 달리 재취업에 유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저학력 여성들보다 더 늦게 복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박수미, 2002)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4) '비정규직 이탈형', (5) '내 사업 이탈형', (6) '정규직 이탈형'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 가구소득에는 배

우자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배우자 소득과도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은 기혼여성의 경우 이 세 유형의 여성들처럼 후기에 서서히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전격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을 서서히 이탈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본 분석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이 실증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출산 여부와 자녀 수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분

석한 결과, 출산한 여성의 경우 거의 모든 유형에 속할 확률이 낮다고 추정되었다. 즉 출산경험이 있다면 (1) ‘노동시장 지속이탈형’에 비해 다른 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작다. 이는 출산이라고 하는 생애 사건이 다양한 노동시장 이행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녀 수의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자녀 수가 많을수록 (3) ‘후기 정규직 진입형’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지만, (4) ‘비정규직 이탈형’에 속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1차(2007년)부터 8차(2020년)까지의 14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s)과 다항 로짓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집단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집단유형을 개념화하여 명명한 다음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각 유형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특히 사회문화 심리적 요인인 성 역할 가치관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문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은 (1) ‘노동시장 지속이탈형’, (2) ‘중기 일시정규직 진입형’, (3) ‘후기 정규직 진입형’, (4) ‘비정규직 이탈형’, (5) ‘내 사업 이탈형’, (6) ‘정규직 이탈형’의 총 6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 여성 노동시장의 역동이 비교적 단조롭다는 비판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이 도출되었다. 국내 여

성 노동시장은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경력단절의 현상과 함께 낮은 역동성의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데(민현주, 2012; 박수미, 2002; Brinton & Oh, 2019), 본 분석의 전반부에는 낮은 역동성이 관찰되지만, 결혼 6~7년 이후의 후반부에는 다양한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이제 국내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의 변화는 생애 사건을 겪는 당시의 영향보다는 6~7년 이후에 가족 내 다중역할이 가중되는 시기의 영향으로 후행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본 분석 유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장기간 지속하여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기혼여성의 비중이 선행연구의 결과(51.8%, 45.4%)(민현주, 2012; 최인선·이소영, 2022)와 비교하여 감소(18.4%)하였고, (2) ‘중기 일시정규직 진입형’과 (3) ‘후기 정규직 진입형’이 분석 기간의 중·후반부에 전격적으로 정규직 임금 일자리에 진입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주로 미취학 자녀의 집중 육아 기간을 지나서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들로 불안정한 하향 재취업이 아닌 모습이 특징적이다. 기존의 이중 노동시장 이론(Doeringer & Piore, 1985)을 적용하면, 여성 노동시장은 이탈 후 재취업 시 더 불안정한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정지애, 2019; 최인선·이소영, 2022), 본 분석의 결과를 보면 이제는 이러한 설명이 힘을 잃은 모습이다. 이 여성들은 정규직 임금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자격증 등의 전문적인 역량이 준비되어 있었거나 일정 기간 준비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보이는데, 먼저 진입한 여성들보다 나중에 진입한 여성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추세로 볼 때, 나중에 진입한 여성들의 재취업 준비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3) ‘후기 정규직 진입형’의 비중이 40.0%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통계청의 사회조사(2022)에 따르면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자를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전체의 33.4%를 차지하여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종사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과를 볼 때 기혼여성들의 전문적인 특성을 가진 일자리 진출이 활발하다는 증거이다. 이 여성들은 주로 자녀의 취학 시기에 맞추어 맞벌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또는 여성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회 복귀의 시기를 고려한 전문적인 경력 이음의 열망에 따른 선택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패턴 유형별 결정요인으로 평등적 성 역할 가치관을 가진 여성일수록 결혼과 출산에 따른 초기 10년 이내까지는 노동시장 이행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이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유지하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따른 다중역할 기간에 평등적 성 역할 가치관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 평등인식이 높은 여성의 경우 경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윤미례·김태일, 2016)과 최근의 젊은 코호트에서 평등적 성 역할 가치관을 가진 기혼여성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지속적인 경력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황지선·민현주, 2022)을 함께 고려할 때, 기혼여성의 성 역할 가치관은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설명하는 중요한 예측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노동시장의 복합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성 역할 가치관과 같은 인식의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 세계 또는 가정에서 성별 구분 없이 평등적 성 역할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과 제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 유형별 결정요인으로 연령, 학력, 가구소득, 출산 여부, 자녀 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기혼여성의 높은 연령은 정규직 임금 일자리 선택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4년제 대졸 여성보다 2~3년제 초대졸 여성들이 노동시장 이행궤적에 더 큰 영향력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을 서서히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 기혼여성의 출산경험은 다양한 노동시장 이행에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 수의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노동시장 지위 변수가 최근 노동시장의 특성에서 위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노동시장 지위와 위계의 재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여성 노동시장 이행유형을 구분하고 해석할 때 관찰 시점의 제한 등으로 추세만을 반영하여 실제 노동시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의 오차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 역할 가치관의 문항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 역할 가치관을 타당하게 대표하고 있는가에 관한 의구심 등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유형화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생애 사건으로 인한 여성 노동시장의 통합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족 가치관 중 성 역할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여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어떤 특성이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상호주관적인 영역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 역할 가치관으로 노동 참여 및 지속과 관련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와 유형에

속하여 진로를 형성하게 되는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혼여성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여성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구슬이·정익중(2021).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의 경력단절 영향요인”. 여성연구. 제108권 제1호. 281-308.
- 김영미·류연규(2013). “젠더레짐에 따른 성역할태도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 스웨덴, 독일, 한국 비교 -”. 한국사회복지학회 201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자료. 1217-1244.
- 김정호(2009).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31권 제1호. 105-138.
- 김지경(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Human Ecology Research(HER). 제42권 제3호. 91-104.
- 김지경·조유현(2003).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3호. 181-207.
- 민현주(2012). “자녀출산과 양육시기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 한국사회학. 제46권 제2호. 61-87.
- 민현주·이수경(2018).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지위 변화 유형화: 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4권 제2호. 169-193.
- 박다은·유계숙(2011).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2호. 29-65.
- 박미희·홍백의(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제41권 제4호. 21-49.
- 박수미(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제36권 제2호. 145-174.
- 박찬웅·조선미·김노을(2018). “출산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가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4호. 121-147.
- 변용찬(2010).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가족부(2010). 저출산의 원인분석을 통한 저출산대책 개선과 여성인적자원 활용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 오은진·김소연(2021). “출산·육아기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여성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제1호. 163-208.
- 우석진(2020). (경제분석을 위한) STATA. 경기도: 지필미디어.
- 윤미례·김태일(2016). “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상황, 유형과 영향 요인 분석”.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2호. 153-185.
- 윤자영(2016). 노동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은기수(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제102권. 25-35.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2호. 95-140.
- 이진숙·최원석(2011). “기혼 취업여성의 우울 경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4호. 389-412.
- 임지영(2022).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보건복지포럼. 제308권. 105-118.
- 전혜영(2020).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스트레스에 대한 결혼 전·후 변화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 정성미(2023).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유지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1-25.
- 정지애(2019). “여성직업인의 종사상 지위별 차이와 영향: 개인적·직업적·가치관·일 만족도·일 - 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제22권 제3호. 129-156.
- 정호범(2013).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동기와 태도”. 사회과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121-135.
- 진미정·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 31-51.
- 최은영·곽현주(201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제88권. 429-456.
- 최인선·이소영(2022). “출산 양육기 여성의 일자리 질 변화 유형과 영향 요인”. 여성연구. 제113권 제2호. 107-141.
- 통계청(2022). 2022 사회조사 결과. 서울: 통계청
- 홍성표·임한려(2020). “대학 소재지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분석 : 수도권과 지방대학 졸업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20권 제4호. 117-147.
- 황지선·민현주(2022). “기혼여성의 경력유지에 성역할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생존 분석방법 적용”. 여성연구. 제114권 제3호. 89-111.
- Becker, G. S.(1981). Altruism in the Family and Selfishness in the Market Place. *Economica*, 48(189), 1-15.

- Becker, G. S.(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Brinton, M. C., & Oh, E.(2019). Babies, work, or both? Highly educated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in East Asi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5(1), 105-140.
- Desai, S., & Waite, L. J.(1991). Women's employment during pregnancy and after the first birth: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work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4), 551-566.
- Doeringer, P. B., & Piore, M. J.(1985).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M. E. Sharpe.
- Eagly, A. H.(2013).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Psychology Press.
- Hynes, K., & Clarkberg, M.(2005). Women's employment patterns during early parenthood: A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222-239.
-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374-393.
- Keeley, M. C.(1977). The economics of family formation. *Economic inquiry*, 15(2), 238-250.
- Nagin, D.(2014).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Oppenheimer, V. K.(1997). Women's employment and the gain to marriage: The specialization and trading model.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1), 431-453.
- South, S. J.(2001). The variabl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the timing of first marriage: United States, 1969-1993. *Social Science Research*, 30(4), 606-626.
- Stickney, L. T., & Konrad, A. M.(2007). Gender-role attitudes and earnings: A multinational study of married women and men. *Sex Roles*, 57, 801-811.
- Wenk, D., & Garrett, P.(1992). Having a baby: Some predictions of maternal employment around childbirth. *Gender & Society*, 6(1), 49-65.

Abstract

Analysis of the Trajectory of Labor Market Transition According to Women's Marriage and Childbirth: Focusing on Gender Role Values

Jiseon Hwang*·Hyunjoo Min**·Minchul Jeong***

This study aims to help understand the overal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mong married women in Korea based on their life events including marriage and childbirth, by classifying the trajectory of their labor market transition into different types. In this regard, this study offers a dynamic analysis on how the values of gender roles, the socio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under rapid changes in our society, affect the trajectory of women's labor market transition.

In order to analyze the labor market transition trajectory of married woman in Korea,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1st to 8th KLoWF and by applying the methodology of GBTM, the optimal labor market status change type for each group according to women's marriage and childbirth was derived, and the meaning of each type was analyzed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a multinomial logit model was applie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change in the status of married women in the labor market, especially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val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x types were analyzed. Second, as a representative feature of this type of analysis, the proportion of married women who continued to leave the labor market for a long period of time decreased, and a type of unique characteristics that suddenly entered regular wage jobs in the middle and late stages was analyzed as a trend. Third,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values was also verified. This study helped understand the complex and multifacete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transition trajectory following women's marriage and childbirth, and emphasized policy proposal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women's labor market and the values of equal gender roles in our society.

Keywords : gender role values, married women, female labor market, Group-based trajectory model,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 First Author: PhD course, Department of Vocation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Vocation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 Co-Author: PhD course, Department of Vocation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여군에 대한 언론 보도 연구

조선웅*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여군에 대한 언론 보도 구조 파악을 위해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여군에 관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와 경향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다. 빅카인즈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파이썬을 활용하여 토픽모델링 등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보수와 진보 언론사는 여군 관련 보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그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되었고, 최근으로 올수록 양 언론사 모두 성폭력 관련 이슈를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 여군, 뉴스, 토픽모델링, 동적 토픽모델링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로 (skingsuper@gmail.com)

I. 서론

한국에서 여군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연구가 증가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¹⁾. 1950년 여자의용군 500여 명을 시초로 하는 한국 여군은 2020년 1만 3천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간부 대비 7.4% 정도인데, 2022년에는 그 비율이 9%로 증가하였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여군 비율 15.3% 달성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여군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2020: 123; 국방부, 2023: 287)²⁾. 또한 2019년에 여군 최초 소장 진급자가 나오는 등 상위 계급으로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남성 병역자원 한계, 여권 신장, 국방과학기술 발달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김경순, 2011), 향후 여군 증가 및 역할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여군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여군 관련 뉴스를 분석해보려 한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텍스트 자료인 뉴스에 대해서 통상 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분석 방법의 발달에 힘입어 보다 더 면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요즈음 널리 활용되어 영향력이 증가한 SNS는 다소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반면, 뉴스는 대체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Iyengar, 1994; Rapp et al., 2013).

뉴스가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뉴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 전달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그치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많은 이슈들이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점이 요구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각 언론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가치관, 처한 환경 등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낸다(박윤정 외, 2023; Baron, 2006). 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개별 언론사의 입장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언론사 간의 차이를 간과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이분법

1) 빅인즈 전국일간지 대상 여군 검색 기사는 1990년 59건, 2000년 163건, 2010년 240건, 2020년 486건이다. RISS에서 제목에 여군이 포함된 학술논문은 1990년-1999년 4건, 2000년-2009년 15건, 2010년-2019년 51건이다.

2) 칸터(Kanter, 1993)에 따르면 조직 내 여성 비율이 약 15%보다 낮게 되면, 개인 특성이 여성이라는(열세적) 지위에 묻히게 된다. 하지만 여성 비율이 15%를 넘어서서 35% 정도에 이르게 되면 여성끼리 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여군이 국방부의 계획대로 2027년경 15% 비율을 넘어서게 된다면, '토큰(tokens)'의 지위에서(의미 있는) '소수자(minority)'의 지위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 통용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분법은 흔히 ‘보수’와 ‘진보’로 불린다.

특히, 사람들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기사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즉, 사람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방향이 유사한 뉴스를 들으며 본인의 성향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심지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은 정보를 접할 때 그러한 정보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김영옥, 2009; Gentzkow & Shapiro, 2006). 그 결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 간 생각 차이는 더 깊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이는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 언론사 역시 많은 사안들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낸다(김영옥, 2011; 이재경, 2008). 안보 영역을 예로 들자면, 보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을 대결 상대로 보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을 대화 상대로 보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다소 유연한 경향을 취하기도 한다(김경희·노기영, 2011; 손영준, 2004; 신동호, 2020). 젠더 영역의 경우 보수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입장에 서는 경향이 있으며, 진보는 상대적으로 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이수범·송민호, 2020; 홍지아, 2022). 예를 들어 보수 언론은 대체로 여성주의 시각을 축소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젠더 갈등의 원인보다는 갈등 그 자체를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홍지아, 2017).

그동안 여군 이슈에 대해 한국의 보수와 진보 언론사가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지 분석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³⁾. 하지만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보수 언론사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입대하여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떠한 쓰임을 받고, 그 결과 군 전투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군 조직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개인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군 조직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여군의 기능적인 측면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언론사는 상대적으로 군 조직의 입장보다는 여군 개인의 입장에서 사회화 과정 간 겪는 어려움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성이 군에 진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동안 여군이 큰 후퇴 없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발전해

3) 여군 관련 뉴스를 분석한 연구로는 정인정 외(2022)가 있다. 그런데 이는 시기적으로 2014-2019년으로 국한되고, 보수와 진보의 차이에 대해 논하지 않고 있으며, 시기에 따른 토픽의 변화를 분석하지 않고 있어 본고와 다소 차이가 있다.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와 진보 언론사의 여군 관련 뉴스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약 500여 명에 불과했던 여군은 현재 1만 3천 명을 넘어섰고, 소장 진급자가 나왔으며 군의 다양한 병과 및 직위에 진출했다. 앞으로도 특별한 구조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여군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그들의 역할이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군 발전의 당위성과 경향성을 고려한다면 의외로 보수와 진보 언론사의 여군 관련 보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여군 발전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긴장과 갈등이 수반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여군 발전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희생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조선웅, 2015). 군 조직 내부에서는 여군과 남군의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여군들의 좌절이 있었다(김재은·김지현, 2021).

이러한 배경 속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여군 관련 뉴스가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특히, 보수와 진보 언론의 여군 관련 보도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으려 한다. 또한, 시간에 따라 여군 관련 뉴스 보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뉴스와 우리의 인식 및 행동 등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고의 작업은 향후 군 조직 내 여군의 진출 및 적응, 역할 수행 등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 검토: 여성의 군 조직 진출과 갈등

군 조직은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서 남성들의 영역이었다. 군 조직의 성별 구성을 근거로 들면, 비교적 최근까지도 남성은 군 조직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Goldstein, 2001: 10). 공동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군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기도 하였지만, 전쟁이 끝나면 대체로 이들은 다시 군에서 자리를 잃고 떠나야 했다(Carreiras, 2006: 5-12).

한국의 경우도 국제 사회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전쟁 발발로 국가에 큰 위기가 닥치자 여자의용군이 조직되어 여성이 군 조직에 참여하게 되었다. 1950년 9월, 모집된 500명 중 491명이 훈련을 수료하고 여자의용군 1기로 임관하였다. 임관 후 전방 부대에 배치받게 된 여군은 문서 연락,

필서, 통역, 정훈, 위문 등의 임무를 담당했다. 1951년 8월 이후 전선이 다소 안정되자 당국에서는 여군을 전선의 후방에 배치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전방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던 여군들은 전역하게 되었다. 전역하지 않은 여군들은 계속해서 군에 남아 임무를 수행했지만, 주로 후방에서 남군을 보조하는 임무에 국한될 뿐이었다(민경자, 2008).

이후 군 조직에서 주변적인 여군의 지위는 약 4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먼저 여군의 규모는 1989년에도 755명에 불과했다(국방부, 2011: 296). 여자의용군이 약 500명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동안 여군 규모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 동안 여군들은 남군들처럼 병과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여군은 ‘여군병과’에 소속되어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노비츠(Janowitz, 2017[1961])에 따르면 군 조직에서는 필수 경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이에 따라 엘리트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경력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필수 경력은 전투 임무를 주로 하는 지휘관과 참모직을 번갈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군은 제도적으로 전투 병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한 이 시기 동안 여군은 여성으로서의 기본권도 상당 부분 침해당했다. 짧은 예외 기간을 제외하면 기혼자는 군에 지원할 수 없었고, 미혼으로 입대한 여군은 결혼과 출산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일부 예외 기간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하사관은 결혼과 출산이 모두 금지되었고, 장교의 경우는 결혼은 허용하되 출산은 금지하는 기조가 지속되었다(국방부, 2011; 민경자, 2008).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 바뀌게 된다. 1988년경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군 역할 확대에 관한 연구가 각 군에서 이루어졌고, 1988년부터 여군 장교와 하사관의 출산이 허용되었으며(국방부, 2011; 민경자, 2008: 344), 여군병과가 해체되어 1990년부터는 여군들이 군의 다양한 병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군병과 해체 이후 여군 신규 임용 규모를 늘리면서 1999년에는 2,085명의 여군이 군에 복무하고 있었다(국방부, 2011: 502).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군의 복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는 군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군 내 불임휴직제도가 2010년도에 신설될 것은 여군의 필요성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먼저 적용되었던 것이 군대로 확대된 것이다(국방부훈령 제1279호). 오히려 군 내

부에서는 1999년 여군담당관의 건의에 의해 보건휴가가 폐지되는 등 모성보호제도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 었보인다(국방부, 2011: 507).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1990년 이후 대체로 여군 복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 여군병과가 해체되었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공사, 육사, 해사에 최초의 여생도가 입학하게 되었다. 여군병과 해체는 여군이 군의 다양한 병과로 진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각 군 사관학교 입학 허용은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양성교육을 받게 하였다. 여자의용군교육대를 모체로 하여 그동안 여군만을 양성했던 여군학교도 2002년에 문을 닫게 되었다. 양성과정, 병과 선택 등에서 군 조직의 주류와 분리되어 있던 여군이 어느 정도 군 조직에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는 여군의 군 조직 내 진출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들이 다수 발생했다. 각 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여군 장교들이 그동안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직위에 최초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여군 최초의 전투 병과 준장 진급자가 나오게 되었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그동안의 제도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있던 여군에 대한 배제가 대부분 폐지되었다. 2011년에 최초 여 학군단이 설치되었고, 2014년에는 육군 삼사관학교가 여생도 입학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여군병과 폐지 이후에도 여군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갑, 포병 등의 병과가 여군에게 개방됨으로써, 2014년을 기점으로 육군의 모든 병과가 여군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동안 여군이 전투 직위를 맡더라도 보병 부대 지휘관(자)이 아닌 신병 부대 지휘관(자)에 임명되는 등 남녀가 차별적인 경력관리모형을 적용받았지만, 2018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남녀 동일 경력관리모형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꼭 여군의 복무 환경 개선 및 군 조직으로의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종합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군을 위한 제도가 정비될 경우 남군은 이를 불공정하다고 느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 결과 제도적인 차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배제와 차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Yoder, Adams, & Prince, 1983: 334).

특히, 이 과정에서 신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애초에 여성의 군 조직 참여를 가로막던 핵심적인 명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체 능력이었다. 과학기술의 발달 및 군사 전략의 변화로 더 이상 신체 능력이 과거와 같은 효용을 갖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체 능력은 여군을 이등 군인으로 속박하

는 효과를 지니기도 한다. 때로는 신체 능력 그 자체에 의해서 여군은 열등한 군인이 되기도 하지만 남성의 신체는 우월하고 여성의 신체는 열등하다는 오래된 관념이 문화로 굳어져서 여군을 옥죄기도 한다(김엘리, 2012: 164-167; Centeno & Enriquez, 2016: 13-17). 신체 능력 그 자체는 여군이 노력을 통해서 증명해 낼 수 있는 영역이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남군이 여군을 온전한 동료로 여기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신체를 매개로 한 여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비교적 양성평등한 군대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군에서도 관찰된다. 미국의 경우 남군이 여군을 바라보는 관점은 흔히 slut-bitch의 이분법으로 이해된다. 이는 여군이 성적으로 접근 가능하면 slut이라 칭하고, 그렇지 않으면 bitch로 명명하는 것이다. 즉, 남군이 여군을 바라보는 관점은 군인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오로지 그들의 성적인 신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King, 2015).

한국의 경우도 녹록치 않다. 한국은 가부장제와 남아선호사상이 뿌리 깊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전히 군 병력 충원의 상당 부분은 남성 징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군 간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 조직 구성원의 대부분은 남성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다(김엘리, 2012; 조선웅, 2019). 이러한 가운데 비교적 최근 들어 여군 복무 편의를 위한 제도들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차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군에 대한 은근한 차별과 괴롭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류영숙, 2002).

이러한 경우 여군 신체는 은근한 차별과 괴롭힘을 수행할 최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여군이 하위 계급에 과다대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국회뉴스ON, 2019.10.10.), 군 조직의 위계서열이 신체를 매개로 한 차별 및 괴롭힘과 결합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김수미·이새롬·한민경, 2023; 피우진, 2017). 또한, 군 조직의 특수성, 이로부터 기인한 군사법원 시스템은 군 내 성폭력 사건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이동임, 2021).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 내 성폭력 사고는 2017년 102건에서 2021년 99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여(여성신문, 2022), 이러한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여군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고 여군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상위 계급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졌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여군이 군 조직에 통합되고 역량을 발휘하는 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자료와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여군을 검색어로 하여 수집된 언론 기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집 기간은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언론사는 ‘보수’와 ‘진보’를 각각 2개씩 선정하였다. 보수 언론사로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진보 언론사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하였다⁴⁾. 자료 수집은 여러 언론사의 뉴스를 제공하는 빅카인즈를 활용하였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형태는 본문에서 명사를 추출한 키워드이다.

본문에 여군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사가 모두 검색되다보니, 적절하지 않은 기사들을 제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여씨 성을 가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기사, 여군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정작 기사는 연예 관련 내용인 경우, 여군 대상 포토 뉴스여서 내용이 없는 경우, 중복 기사 등 분석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사들을 제외하였다. 특히 중앙일보의 경우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 출연했던 여성 연예인에 관한 중복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러한 기사는 여군과 거의 관련 없는 것들이어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최초 2,820개의 기사에서 1,092건을 제외하고 1,728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경우는 최초 1,876건에서 279건을 제외한 후 1,597건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검색 키워드인 ‘여군’, 신문명을 비롯한 몇몇 불필요 단어들과 1글자 단어는 불용어 처리하였다.

분석의 주요 방법은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여군 관련 뉴스를 분석하는 것이다.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은 문서가 복수 개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토픽은 단어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이때 토픽은 단어나 문서처럼 관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인데, 이를 파악하면 대규모 텍스트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lei, 2012; Blei, Ng, & Jordan, 2003).

그런데 문서에 시간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토픽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간 정보가 무시되는 LDA 토픽 모델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특정 시간 동안 만들어진 토픽 분포의 평균을 계산해서 토픽 분포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처럼 토픽 트렌드를 통해 시간에 따른 토픽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토픽 분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토픽 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에

4) 조선일보의 경우 자료수집이 원활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2곳, 진보 2곳의 언론사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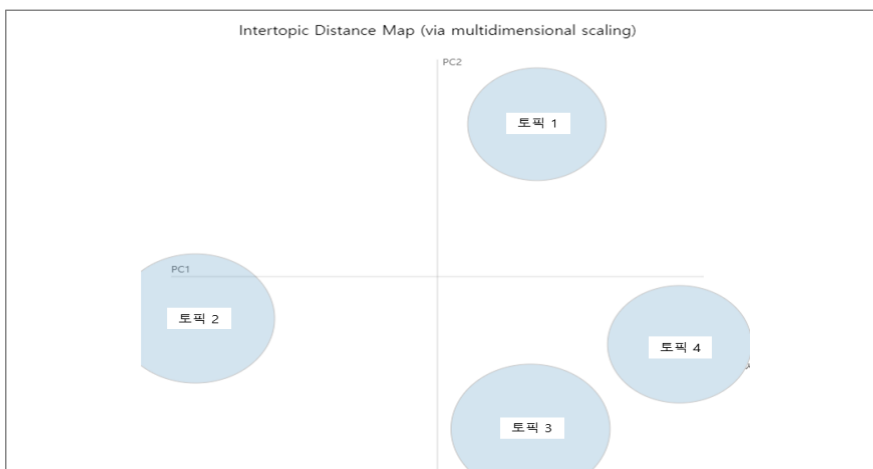
기반한다. 따라서 보다 더 현실적인 가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토픽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고, 이에 기반한 방법이 바로 동적 토픽 모델링(Dynamic Topic Modeling)이다(Blei & Lafferty, 2006). 본고에서는 시간에 따른 토픽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동적 토픽 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였고, 시간은 1년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파이썬을 활용하여 진행하였고, 토픽 모델링 분석과 시각화에는 gensim 패키지 등을 이용하였다.

IV. 결과

1.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 대한 분석

먼저, 토픽 개수를 정하기 위해 gensim 패키지를 활용해 토픽 개수 2개부터 40개까지에 대해 응집도(coherence)와 혼란도(perplexity)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응집도는 대체로 토픽 개수가 적을수록 높은 반면 혼란도는 토픽 개수가 많을수록 낮게 나와서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토픽 개수를 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해 응집도에 더 초점을 맞추되 각 토픽별로 중복되지 않고 잘 구분되는지를 감안하여 토픽 개수를 4개로 정하였다. [그림 1]은 pyLDAvis를 활용하여 각 토픽별 거리와 분포를 시각화 한 것이다.



[그림 1] 보수 언론 토픽의 분포와 토픽 간 거리 시각화

토픽 개수 4개로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첫 번째 토픽은 ‘여군 장교 훈련’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의 여군 장교들이 각 직위에서 훈련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과거에는 주로 행정이나 보조적인 일을 도맡아 했던 여군이 군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직위에 처음 보직되고, 이러한 내용이 ‘최초’라는 표현과 함께 보도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각종 항공기의 ‘조종사’는 여군이 주변부에서 탈피하여 군의 핵심 영역으로 진입하는 상징성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로 보인다. 이처럼 여군의 진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장교에게 집중되었고 부사관은 다소 소외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토픽은 ‘성폭력 사건’으로 명명하였다. ‘사건’, ‘성추행’, ‘피해자’, ‘조사’, ‘성폭력’ 등의 키워드를 통해 어떤 내용의 뉴스들이 두 번째 토픽으로 분류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하사’로 이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주로 하사를 포함한 하위 계급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1> 보수 언론 여군 뉴스 토픽 모델링 결과

구분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명	여군 장교 훈련	성폭력 사건	국가와 전쟁	여군 지원 및 복무
키워드	1 여성	사건	여성	여성
	2 장교	육군	대통령	한국
	3 육군	부대	북한	복무
	4 해군	성추행	미국	북한
	5 조종사	국방부	미군	지원
	6 공군	피해자	사람	군인
	7 훈련	하사	부대	남성
	8 대위	수사	한국	훈련
	9 선발	조사	훈련	후보
	10 전투	성폭력	영화	교육
전체 토큰 대비 각 토픽 비중	21.2%	27.8%	28%	23%

세 번째 토픽은 ‘국가와 전쟁’으로 명명하였다. 주요 키워드로 북한, 미국, 한국의 국가명이 눈에 띈다. 특정 국가의 군 관련 활동이나 국가 간 관계 속에서 여군이 언급된 뉴스들이 세 번째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네 번째 토픽은 ‘여군 지원 및 복무’로 명명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직업으로서 복무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이 토픽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표 2〉는 동적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보수 언론 첫 번째 토픽의 키워드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여군 장교 훈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육군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육군의 규모가 타군보다 커서 그만큼 보도할 내용이 많은 점에 기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해군보다 공군에 대한 관심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해군이 공군을 제치고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는데, 이는 여군의 잠수함 최초 임무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여성(여자 포함) 키워드가 점점 후순위로 밀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2010년까지 1-2순위 키워드에 머물렀던 장교라는 단어가 후순위로 밀렸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성 장교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여성 장교의 출현 자체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보다는 이들이 수행하는 훈련으로 관심의 초점이 바뀐 것이다.

〈표 2〉 보수 언론 첫 번째 토픽 키워드 변화

연도	키워드						
	1	2	3	4	5		
1990년	장교	훈련	육군	여성	여자		
1991년		육군	훈련			훈련	공군
1992년			여성				
1993년							
1994년							
1995년		여성	육군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육군	장교	훈련	여성	조종사		
2005년			여성	훈련			
2006년				해군			
2007년							
2008년							

연도	키워드				
	1	2	3	4	5
2009년	장교	육군	훈련	여성	
2010년	훈련	장교	육군	해군	여성
2011년		해군	여성	장교	육군
2012년				육군	장교
2013년		여성	해군		
2014년		해군	육군	여성	
2015년		육군	해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육군	훈련		공군	부대
2020년		해군			장교
2021년		해군	훈련	장교	공군
2022년					

〈표 3〉 보수 언론 두 번째 토픽 키워드 변화

연도	키워드					
	1	2	3	4	5	
1990년	사건	피고인	육군	장교	국방부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피고인	사건		성추행	사단	
1996년						
1997년	사건	피고인	성희롱			
1998년						
1999년		성추행			육군	사단
2000년						
2001년				성추행	장교	
2002년	사단	사단				
2003년						
2004년			사건	성추행	육군	사단
2005년						
2006년						
2007년						

연도	키워드				
	1	2	3	4	5
2008년		육군	성추행		
2009년				부대	
2010년					
2011년				부대	성추행
2012년					
2013년				성추행	부대
2014년					
2015년				부대	성추행
2016년		육군			
2017년				하사	육군
2018년		수사	성추행		
2019년				부대	중사
2020년		하사			
2021년					
2022년					

〈표 3〉은 동적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보수 언론 두 번째 토픽의 키워드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육군’, ‘사단’이 꾸준히 중요 키워드로 도출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사단장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에 대한 여파가 상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에서 제시하진 못했지만 사단장 계급을 뜻하는 ‘소장’이란 단어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0번째 키워드 안에 등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건’이란 키워드와 ‘성추행’이란 키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번째 키워드 안에 ‘성폭력’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고, 10번째 키워드 안에서 ‘성폭행’이란 단어도 찾을 수 없다. 해당 기간 동안 여군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체로 ‘성추행 사건’이란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998년까지 ‘피고인’ 키워드가 중요하게 등장하다가 사라진 점, 2018년부터 ‘피해자’ 키워드가 5번째 안에 등장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수 언론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뉴스가 과거에는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초점을 더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인 여군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는 동적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보수 언론 세 번째 토픽의 키워드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1990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이라크가 주요 키

워드로 도출된 것은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아부그라이브 교도소 가혹행위 사건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북한’ 키워드는 이라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상위 키워드로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 기간에 걸쳐서 ‘미국’ 키워드 역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이라크와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군’도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고 있다. 키워드를 상위 10개까지 확대했을 경우에는 최근으로 올수록 ‘중국’과 ‘우크라이나’ 키워드도 등장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전쟁과 여군,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 관련 여군 뉴스들이 세 번째 토픽으로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5〉는 동적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보수 언론 네 번째 토픽의 키워드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네 번째 토픽명은 ‘여군 지원 및 복무’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토픽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중반까지는 여성이 군에 지원해서 시험을 치르고 선발되어 복무하는 내용들이 이 토픽의 주제로 보인다. 주요 키워드를 10개까지 확대하였을 경우 ‘취업’이라는 키워드도 도출되고 있어, 여성이 군을 직업 중 하나로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경향을 포착할 수 있다.

〈표 4〉 보수 언론 세 번째 토픽 키워드 변화

연도	키워드				
	1	2	3	4	5
1990년	이라크	미국	사람	대통령	북한
1991년					
1992년		사람	미국		
1993년					
1994년	사람	미국	이라크	북한	대통령
1995년	미국	사람	북한	이라크	
1996년	사람	북한	미국	미군	
1997년		미국	북한		
1998년					대통령
1999년					영화
2000년	북한	사람	미국		
2001년	미군	미국	미군	사람	이라크
2002년			이라크		
2003년		영화			
2004년				대통령	북한

연도	키워드					
	1	2	3	4	5	
2005년	북한			북한	대통령	
2006년		미군		이라크	한국	
2007년		미국	미군	한국	대통령	
2008년		한국	미국	미군	전쟁	
2009년				전쟁	미군	사람
2010년						
2011년				대통령		사람
2012년						사진
2013년		대통령	한국	미국	중국	
2014년						
2015년			미국	한국	사람	
2016년						
2017년	대통령	북한	미국	한국	사람	
2018년				사람	여성	
2019년	북한	대통령	여성	미국	사람	
2020년	대통령	북한		사람	미국	
2021년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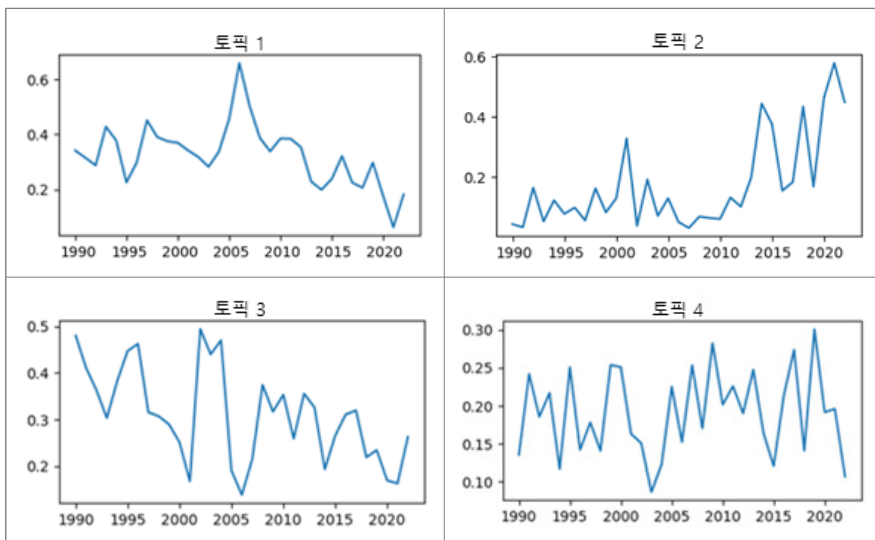
2010년대 중반부터는 ‘국방’ 키워드와 ‘병력’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복무 제도의 주요 내용이 더 이상 여성이 군에 지원하여 복무하는 그 자체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키워드를 10개까지 살펴보면 점점 국가, 국방부, 군대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 병역 자원의 한계와 맞물려 여군 증가의 당위성 부여, 여군 병력의 활용 등에 관한 주제의 뉴스들이 보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5〉 보수 언론 네 번째 토픽 키워드 변화

연도	키워드					
	1	2	3	4	5	
1990년	여성	사회	복무	시험	제도	
1991년					남성	
1992년			남성	남성	시험	
1993년				복무		
1994년				복무		
1995년					시험	
1996년		남성	사회			
1997년			대학			
1998년						
1999년			사회			
2000년			대학		지원	
2001년				후보		
2002년			지원		대학	
2003년						
2004년		지원	남성	남성	채용	
2005년						
2006년			복무	복무	국방	
2007년		국방				
2008년		의원	복무	국방부		
2009년					남성	
2010년		복무	국방부	국방부		
2011년						
2012년		복무	국방	병력		
2013년						
2014년		남성	복무	병력	국방	
2015년						
2016년		남성	복무	병력	국방	
2017년						
2018년		남성	복무	병력	국방	
2019년						
2020년		남성	복무	병력	국방	
2021년						
2022년		남성	복무	병력	국방	

[그림 2]는 시간에 따른 보수 언론 여군 관련 뉴스 각 토픽 비중 변화를 시각화 한 것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번째 토픽인 ‘성폭력 사건’의 비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0년 이후로 증가세가 확연해져서 최근에는 가장 높은 토픽 비중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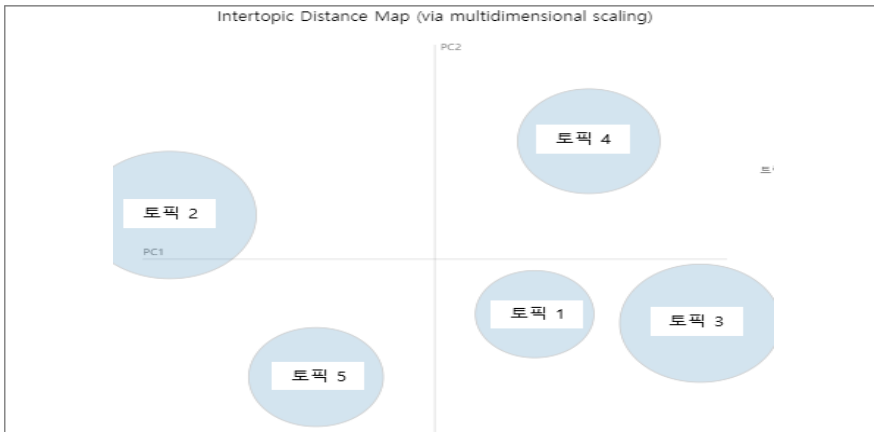
다음으로 다른 토픽의 비중은 대체로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토픽인 ‘여군 장교 훈련’의 경우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토픽 비중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사관학교에 최초로 입학한 여성들이 임관 후 진급을 거듭하며 상징적인 ‘최초 진출’을 연이어 하던 때이다. 비중이 가장 높을 때를 기준으로 보자면 여군 뉴스의 전반적인 흐름이 ‘여군 장교 훈련’에서 ‘성폭력 사건’ 토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보수 언론 여군 관련 뉴스 각 토픽 비중의 변화

2.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대한 분석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gensim 패키지를 활용해 토픽 개수 2개부터 40개까지에 대해 응집도와 혼란도를 확인하였으나,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토픽 개수를 도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보수 언론 뉴스 분석에 적용했던 기준처럼 응집도에 초점을 맞추고, 각 토픽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토픽 개수를 5개로 정하였다. [그림 3]은 pyLDAvis를 활용하여 각 토픽별 거리와 분포를 시각화 한 것이다.



[그림 3] 진보 언론 토픽의 분포와 토픽 간 거리 시각화

〈표 6〉 진보 언론 여군 뉴스 토픽 모델링 결과

구분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 5
토픽명		여군 지원	성폭력 사건	국가와 전쟁	여군과 사회	여군 복무
키워드	1	대학	사건	여성	하사	국방부
	2	인권	피해자	남성	사람	의원
	3	여성	성폭력	한국	전역	육군
	4	학교	부대	사회	군인	부대
	5	지원	해군	군대	사건	국방
	6	국방부	성추행	여자	생각	사건
	7	사건	육군	전쟁	트랜스젠더	장관
	8	교육	장교	군인	복무	공군
	9	육군	공군	남자	대통령	진급
	10	장교	피해	후보	사회	인사
전체 토큰 대비 각 토픽 비중		13%	27.7%	23.8%	18.7%	16.7%

〈표 6〉은 진보 언론 여군 뉴스에 대해 토픽 개수 5개로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이다. 첫 번째 토픽은 ‘여군 지원’으로 명명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이 토픽으로 분류되었다. 두 번째 토픽은 ‘성폭력 사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군’과 ‘공군’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어서 보수 언론의 ‘성폭력 사건’ 토픽 키워드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 토픽은 ‘국가와 전쟁’으로 명명하였다. ‘한국’, ‘군대’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키워드의 범위를 조금 넓힐 경우 ‘미국’, ‘국가’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수 언론의 ‘국가와 전쟁’ 토픽에서 다른 국가명이 상위 키워드로 출현하였던 것에 반해, 진보 언론의 ‘국가와 전쟁’ 토픽은 ‘한국’, ‘사회’ 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 국내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토픽은 ‘여군과 사회’로 명명하였다. 다른 토픽들이 대체로 군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군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반해 이 토픽에서는 군 조직과 사회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조망한 것으로 보인다. 변희수 하사 사건도 이 토픽에 포함이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토픽은 ‘여군 복무’로 명명하였다. 각 군 및 부대에서 복무하고 진급하는 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이 토픽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표 7〉은 동적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진보 언론 첫 번째 토픽의 키워드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이 토픽은 여성이 군에 지원하여 군인이 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이라는 키워드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국방부’나 ‘복무’와 같은 키워드들은 대체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는 여군 모집에 있어 ‘여성’이라는 젠더가 강조되던 과거의 경향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진보 언론 첫 번째 토픽 키워드 변화

연도	키워드				
	1	2	3	4	5
1990년	여성	지원	모집	인력	대학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대학	국방부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대학	모집		국방부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방부	모집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방부	지원	국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방부	대학	복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방부	여성	위원회	인권	인권위
2021년					
2022년					

〈표 8〉은 동적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진보 언론 두 번째 토픽의 키워드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성폭행’, ‘성폭력’, ‘피해자’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추해보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8〉 진보 언론 두 번째 토픽 키워드 변화

연도	키워드								
	1	2	3	4	5				
1990년	사건	성희롱	성추행	육군	장교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성추행	사건	장교		성희롱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사건	성추행			혐의				
2005년					부대				
2006년			육군	장교	대위				
2007년		대위		성추행	부대				
2008년				부대	성추행				
2009년				대위					
2010년		부대							
2011년									
2012년									
2013년		육군	부대	부대	대위				
2014년		성추행	육군						
2015년		육군	부대						
2016년		성폭력	피해자						
2017년			부대	육군					
2018년			조사	부대					
2019년			부대	조사					
2020년		피해자	성폭력	수사	성추행				
2021년					공군				
2022년					사망				

〈표 9〉는 진보 언론 세 번째 토픽의 키워드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미국과 이라크 간 전쟁 등이 주로 보도되던 것에서 점차 한국의 군대와 사회에 관한 것으로 토픽의 내용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9〉 진보 언론 세 번째 토픽 키워드 변화

연도	키워드					
	1	2	3	4	5	
1990년	여성	이라크	미군	전쟁	미국	
1991년						
1992년						
1993년				미국	전쟁	
1994년						
1995년		미군	이라크	미국	전쟁	
1996년			미국			
1997년		미국	미군	전쟁	이라크	
1998년			미군			
1999년			전쟁	미군	사회	
2000년			미군	미국	전쟁	이라크
2001년				미군		
2002년		이라크	미국	미국	전쟁	
2003년			미군			
2004년		이라크	미군			
2005년		미국	이라크	미군		
2006년			미군	이라크		
2007년				전쟁		이라크
2008년			한국	미군	전쟁	
2009년		사회		사진		
2010년		한국	사회	미국	남성	
2011년				남성		
2012년				남성	미국	미국
2013년					군대	
2014년				남성	한국	군대
2015년						
2016년		사회	남성	한국	군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군대	사회	남성	한국	
2022년			사회	한국	남성	

〈표 10〉 진보 언론 네 번째 토픽 키워드 변화

연도	키워드						
	1	2	3	4	5		
1990년	투표	사람	여자	영화	생각		
1991년							
1992년							
1993년	사람	투표	군인	자신	복무		
1994년							
1995년		여자				영화	생각
1996년							
1997년							
1998년		영화				여자	군인
1999년							
2000년						생각	
2001년		영화					군인
2002년						생각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역	하사	사람	트랜스젠더			
2019년			군인				
2020년	하사	전역	트랜스젠더	군인			
2021년							
2022년							

〈표 10〉은 동적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진보 언론 네 번째 토픽의 키워드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과거 영화나 방송 등에서 조망된 여군 관련 내용들과 관련된 토픽에서 점차 ‘전역’, ‘엄마’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는 등 사적인 측면과 관련한 내용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으로 오면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문제와 변희수 하사 관련 문제로 토픽의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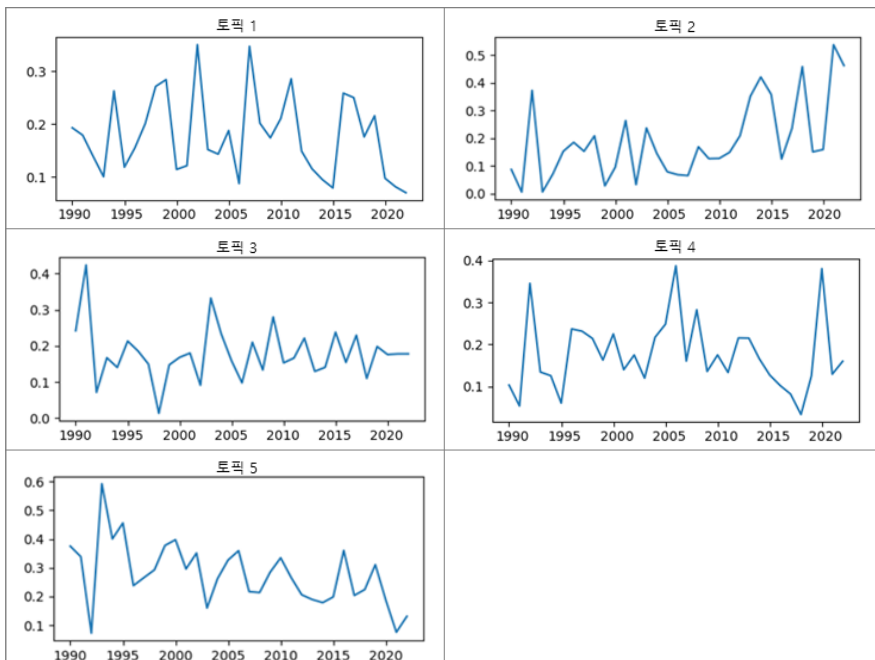
〈표 11〉 진보 언론 다섯 번째 토픽 키워드 변화

연도	키워드				
	1	2	3	4	5
1990년	장교	부대	훈련	공군	육군
1991년				공군	공군
1992년			부대		
1993년			육군	여성	
1994년		훈련			부대
1995년			훈련		
1996년		부대			육군
1997년			여성	훈련	
1998년		여성			부대
1999년			육군	육군	공군
2000년		여성			
2001년		부대	부대		
2002년			육군		
2003년		여성	부대	공군	
2004년			육군		부대
2005년		육군	여성	해군	
2006년					장교
2007년	육군		해군	공군	여성
2008년	장교			공군	
2009년	육군	장교	해군	전투	
2010년					해군
2011년	장교	공군	부대		
2012년		육군		공군	
2013년	해군	육군	장교	부대	공군
2014년				장교	
2015년		해군	부대	장교	공군
2016년			부대	장교	
2017년		부대	해군	장교	공군
2018년					

연도	키워드				
	1	2	3	4	5
2019년		해군	부대	공군	장교
2020년			공군	부대	
2021년				장교	부대
2022년					

〈표 11〉은 동적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진보 언론 다섯 번째 토픽의 키워드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여군 복무와 관련한 다섯 번째 토픽은 시간에 따른 큰 변화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그림 4]는 시간에 따른 진보 언론 여군 관련 뉴스 각 토픽의 비중 변화를 보여준다. ‘성폭력 사건’으로 명명한 두 번째 토픽을 제외한 다른 모든 토픽이 큰 변화가 없거나 대체로 토픽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수 언론 여군 관련 뉴스의 토픽 비중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 경향이다. 특히 보수 언론 여군 관련 뉴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성폭력 사건’ 토픽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토픽 비중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두 번째 토픽과 나머지로 나누어도 될 정도이다.



[그림 4] 진보 언론 여군 관련 뉴스 각 토픽 비중의 변화

3. 보수와 진보 언론의 여군 관련 뉴스 비교

보수와 진보 언론의 여군 관련 뉴스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차이가 도출되었다. 예상했던 것과 같이 보수 언론사는 군 조직 내 여군 활용에 더 초점을 맞춘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2000년대 중반에는 여군 장교의 진출을 집중 조명하였다. 여군 지원 및 복무와 관련한 토픽에서도 최근으로 오면서 병역 자원으로서의 여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체로 군 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토픽의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보 언론은 군 당국의 입장보다는 여군 개인의 입장을 강조한 토픽의 뉴스가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여군이 아니라 좀 더 사적인 측면의 여군에 초점을 맞춘 토픽이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조직 내에서 여군이 겪는 피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더 두드러지게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군 관련 뉴스의 보수와 진보 차이는 주로 과거에 더 두드러졌다. 즉, 언론의 정파성에 따른 효과가 과거에 강하게 나타났고, 최근으로 오면서 그러한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동적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살펴 보았듯이, 최근으로 오면서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다른 토픽들은 그 비중이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이는 보수와 진보 언론사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결국 토픽의 비중만 기준으로 하면 ‘성폭력 사건’ 토픽과 나머지 토픽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정도가 되었다. 물론 ‘성폭력 토픽’에서도 보수와 진보 언론사의 접근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보수 언론사는 피고인에, 진보 언론사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도 주로 과거에 두드러졌고, 최근으로 오면서 그 차이가 축소되었다. 즉,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언론의 여군 관련 보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감소하였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집중 조명으로 수렴하게 되었다.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군 관련 뉴스의 특징을 포착해내기 위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여군 기사를 분석하였다. 빅카인즈에서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파이썬을 통해 LDA 토픽 모델링과 동적

토픽 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보수와 진보 언론 간 여군 관련 보도의 차이점을 도출하였고, 시간에 따라 여군 관련 뉴스의 토픽이 변화하는 것을 포착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 언론의 여군 관련 뉴스가 성폭력 사건으로 수렴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해 보인다. 그만큼 군 조직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충격을 받으며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폭력 문제는 ‘범죄’라는 사실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정파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이슈들은 대체로 가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성폭력 문제는 이러한 정파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질 나쁜 범죄일 뿐이다. 군 조직의 존재 이유가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우애로 똘똘 뭉쳐야 할 조직 구성원 간 성폭력 범죄는 더 무겁게 다가온다. 더군다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강력한 위계서열이 영동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동안 여군의 규모를 늘리고 그들의 진출을 독려하며 제도를 정비했던 것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워 보인다. 양적인 확대, 상징적인 진출, 가시적인 제도의 개선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실제 복무 환경 및 동료들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이를 개선하려는 군 조직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상황이 그렇게 호전되지 못한 점과 위계 서열 및 폐쇄성 등 군 조직의 독특한 특징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군 조직과 민간 사회와의 접점을 늘리고 군 조직의 사회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유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토픽 모델링의 토픽 개수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토픽 모델링은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텍스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결과는 토픽 개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토픽 개수를 결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응집도와 혼란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토픽 개수를 도출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응집도를 기준으로 하여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비단 필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 자료의 성격과 연구 목적에 따라 토픽 문제의 결정에 있어 연구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토픽 모델링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

했듯이 토픽 모델링은 대량의 문서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다 섬세한 접근과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토픽 모델링의 방법이 다소 부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연구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여군에 대한 보도에서 ‘성폭력 사건’ 토픽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맞지만, 본고의 분석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면면과 미묘한 차이를 들여다보기 쉽지 않다. 통상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성폭력 관련 보도 양태가 달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군 보도에 있어 ‘성폭력 사건’ 토픽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간 미묘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추후 질적인 방법을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보수와 진보 각각 2개 언론사를 선정하여 총 4개의 언론사에 대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결과 해석 및 일반화에 다소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군 관련 뉴스를 토픽 모델링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특히 동적 토픽 모델링을 통해 시간에 따른 토픽의 변화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국방 모성보호제도 운영 훈령(국방부훈령 제1279호, 시행 2010.10.28.)
- 국방부(2011). *여군60년사*. 서울: 국방부.
- _____(2020).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_____(2023). *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 국회뉴스ON(2019.10.10.). “[2019국감] 김중로의원 “장성급 여군 5명에 불과
...최고 계급 17년째 ★”. <https://naon.go.kr/content/html/2019/10/10/d3808e6d-208e-480e-ae4d-987e804af478.html>에서 2023.9.8.
인출.
- 김경순(2011). “국방환경의 변화와 여군의 역할 확대”. *민족연구*. 제45호. 113-137.
- 김경희·노기영(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
언론학보*. 제55권 제1호. 361-387.
- 김수미·이새롬·한민경(2023). “군 내 성희롱 피해 원인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제34권 제4호. 117-144.
- 김영옥(2009). “독자가 본 한국 언론의 정파성”. *미디어인사이트*. 제3호. 1-30.
- _____(2011).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
움 및 세미나*. 제5호. 107-136.
- 김엘리(2012). “초남성 공간에서 여성의 군인되기 경험”. *한국여성학*. 제28권 제3
호. 145-180.
- 김재은·김지현(2021). “여군의 군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중
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33권 제1호. 507-538.
- 류영숙(2002). *여성장교의 경험으로 본 한국군대의 젠더정치*. 연세대학교 사회학
과 석사학위논문.
- 민경자(2008). “여군의 창설과 발전”. *군사*. 제68호. 325-366.
- 박윤정·이세영·이은성·금희조(2023). “ccLDA와 의미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뉴스 의제의 정파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호. 48-60.
- 손영준(2004). “미디어 이용이 보수 진보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2호. 240-266.
- 신동호(2020).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보수와 진보 언론의 ‘국가안보’ 프레임 분
석”. *군사논단*. 제104호. 141-166.
- 여성신문(2022.02.18.). “군 성폭력 4년간 10배 폭증...성추행 가장 많아”.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63>에서

2023.9.8. 인출.

- 이동임(2021). “군 성폭력범죄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전문화연구*. 제13호. 59-79.
- 이수범·송민호(2020). “디지털 성범죄 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제57권 제4호. 150-195.
- 이재경(2008). “한국의 저널리즘과 사회갈등: 갈등유발형 저널리즘을 극복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4권 제2호. 48-70.
- 정인정·이지수·조은영·장정운(2022). “워드 임베딩을 활용한 ‘여군’ 이미지 분석: 2014-2019년 기사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8권 제1호. 323-348.
- 조선웅(2015). “육군 ‘군인 부부’ 여군의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제71권 제3호. 33-58.
- _____(2019). “여성의 군대 지원 동기에 관한 연구: 육군 여군 장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100권 제1호. 97-124.
- 파우진(2017).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서울 : 삼인.
- 홍지아(2017).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한국언론정보학보*. 제83호. 186-218.
- _____(2022). “젠더갈등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었는가?: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7권 제2호. 99-155.
- Baron, D. P.(2006). Persistent media bia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0(1-2), 1-36.
- Blei, D. M.(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 Blei, D. M., & Lafferty, J. D.(2006). Dynamic topic models. *Proceedings of th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 Blei, D. M., Ng, A. Y., & Jordan, M. I.(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Carreiras, H.(2006). *Gender and the Military: Women in the Armed Forces of Western Democrac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enteno, M. A. & Enriquez, E.(2016). *War & Society*. Malden: Polity.
- Gentzkow, M. & Shapiro, J. M.(2006). Media bias and reput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4(2), 280-316.

- Goldstein, J. S.(2001). *War and Gender: How Gender Shapes the War System and Vice Vers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yengar, S.(1994).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nowitz, M.(2017[1961]). *The Professional Soldier : A Social and Political Portrait*. New York: Free Press.
- Kanter, R. M.(1993). *Men and Women of the Corporation*. New York: BasicBooks.
- King, A.(2015). The female combat soldie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2(1), 1-22.
- Rapp, A., Beitelspacher, L. S., Grewal, D., & Hughes, D. E.(2013). Understanding social media effects across seller, retailer, and consumer interaction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1(5), 547-566.
- Yoder, J. D., Adams, J., & Prince, H. T.(1983). The Price of a Token.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11(2), 325-337.

Abstract

A Study on Media Coverage of Female Soldiers in the Military Using Topic Modeling

Sunwoong Cho

This study analyzed news articles on female soldiers in South Korean newspapers Dong-A Ilbo, JoongAng Ilbo, Hankyoreh, and Kyunghyang Shinmun from 1990 to 2022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media coverage of women in the military.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BigKinds, and analytical methods such as topic modeling were applied using Python. As a result, conservative press and liberal media showed some differences in reporting on female soldiers, but such differences narrowed over time, and as of late, both media have emphasized on topics related to sexual assault.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implications were drawn and presented.

Keywords : Female Soldiers, News, Topic Modeling, Dynamic Topic Modeling.

* PhD Candidate in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

홍세은**

초 록

본 연구는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의 현황과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원단체 활동가, 변호사, 경찰, 전문가 등 19명을 대상으로 총 35회의 심층면접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국내 성착취 인신매매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국에서 유입되는 성매매 여성이 많으며 이들은 물리적 통제가 없더라도 경제적 취약성이나 정서적 지배를 통해 성착취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성착취 인신매매의 경우 피해자라는 인식의 부재와 피해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피해자로 식별하고 보호·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식별을 위해 표준식별 지표개발 등 피해자 식별 체계 개선과 통역 서비스 등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인신매매, 성착취, 피해자 식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이 논문은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의 일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seeunhong.korea@gmail.com)

I. 서론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2020)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인신매매 범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주 여성이나 지적장애 여성 등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성착취 인신매매를 포함한 인신매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0년 UN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5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의정서 비준에 앞서 2013년 우리 정부는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하였다. 개정 이전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구)형법 제288조 제2항의 ‘부녀매매죄’였으며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은 (구)성매매처벌법에 마련되어 있었다. 개정을 통해 현재의 형법 제289조 제1항에 인신매매죄가 신설됨에 따라 ‘부녀매매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형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인신매매죄 처벌 규정은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는 데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2014년에 3건, 2015년에 6건, 2016년에 8건, 2017년에 3건, 2018년에 2건, 2019년에 3건 적용되는 데 그쳐, 형법상 다른 처벌 규정과 달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다(이미정 외, 2022: 50-51).

이처럼 2015년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처벌 조항이 미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재하여 우리 정부는 관련 정책을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21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인신매매 관련 범죄 행위들을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하였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해당 법은 현대적 의미의 인신매매 개념을 채택하여, 사기나 기만, 권력 남용,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착취한 경우나 피해자가 착취에 동의한 경우도 인신매매로 규정하는 등, 국제기준에 근접한 인신매매 정의를 수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항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 인신매매피해자의 식별 및 보호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는 2021년까지 한국을 1등급 국가라고 평가해왔으나 2022년 7월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2등급 국가로 강등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328-331).

이때 2등급은 ‘미국의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의 최소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인신매매 범죄의 억제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이 2등급으로 강등된 이유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성매매 문제와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0년에 비해 인신매매와 관련된 기소 건수가 감소하였다는 점과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을 적절한 조사와 서비스 없이 강제 추방시킨 점이 강등의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정부에서 피해자 식별 지침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은 점과 법원에서 인신매매 범죄자 대부분에게 벌금, 집행유예 또는 1년 미만의 징역형 등 낮은 수준의 제재를 가한 점도 원인으로 지적되었다(U.S. Department of State, 2022: 328).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시행 초기 단계까지 와 있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실정에 맞춘 인신매매피해자의 식별 및 보호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신매매의 여러 유형 중에서 한국이 인신매매 보고서 상 2등급 국가로 강등된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된 성매매 문제에 집중하여, 성착취 인신매매에 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때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관련 처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련 국내 연구 또한 풍부하지 않은 실정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활동가, 경찰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국내의 성착취 인신매매 현황과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2023년 3월 27일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피해자식별지표를 함께 검토하여 개선방안 논의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성착취 인신매매의 개념과 인신매매죄의 적용

성매매에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피해자를 식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성매매는 성적 행위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지칭하며, 성판매자가 처벌의 대상인

동시에 경우에 따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장응혁·정진성, 2022: 230). 관련하여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약취, 유인의 죄’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되었고 부녀매매죄 대신 인신매매의 죄가 신설되었으며, 성매매처벌법에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신수정, 2016: 209-210).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형법의 인신매매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처벌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정의의 미비라고 설명하였다(이병렬·김희자, 2017: 191-193; 박찬걸, 2021: 162-163). 즉 형법 내에 인신매매의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매매’의 개념을 협소하게 판단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박찬걸, 2021: 163). 이에 따라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 정립과 함께 체계화된 처벌과 대응이 가능한 인신매매 특별법의 제정이 제안되었다(박찬걸, 2021: 196). 또 다른 연구에서도 인신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폐지된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조항¹⁾을 다시 명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정도희, 2019: 136, 140).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인신매매의 범위가 협소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표준화된 식별지표 또한 개발되지 않아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받고 있다(신수정, 2016: 212). 이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 내몰린 잠재적 인신매매피해자들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되고 조사나 증거 제출에도 소극적이게 되어 업주와 같은 인신매매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어려워진다(신수정, 2016: 226).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 추정 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를 독려하는 방안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의 행위가 성매매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이 제안되었다(박찬걸, 2012: 340). 이 외에도 ‘위계나 위력’뿐 아니라 ‘권유나 유인’에 의해 성을 판매하게 된 사람도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의 제18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며, 제3호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3년 4월 5일 개정 시 해당 호가 삭제되었다. 이처럼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함께 다루고자 형법에 통합하였으나, 형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는 폐지된 성매매처벌법 내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다시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규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박찬걸, 2012: 328-329; 박찬걸, 2014: 187-188).

2. 외국인 여성 대상의 성착취 인신매매

이주여성 등의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유입되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주여성이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지만 이주여성으로 관련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들에 대한 성착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병렬·김희자, 2017: 178). 국내에 유입되어 성산업에 투입되는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예술홍행비자나 유학생비자, 단기일반비자 등을 통해 입국하는데, 그중에서도 예술홍행비자(E-6)를 소지한 경우가 많다(두레방, 2007: 19-21). 예술홍행비자는 예술·연예, 호텔·유흥, 운동으로 세부 범주화 되는데(소라미, 2016: 123), 관광 및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담당하는 예술홍행비자(E-6)나 호텔·유흥비자(E-6-2)를 소지한 외국인 중에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다(두레방, 2007: 23). 그런데 이 비자들은 성착취 인신매매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소라미, 2016: 122; 신윤진, 2017: 137-138; 박찬걸, 2021: 154, 160), 이주여성 대상 성착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개인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비자 제도와 결부된 제도적 차원의 허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예술홍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은 고용과 입국 과정에서 성착취적 목적을 가진 업체의 사기와 기망, 경제적 예측 등 인신매매적 수단에 의해 성산업에 유입된다(이병렬·김희자, 2017: 185-188). 즉 이 외국인 여성들은 입국 후 하게 될 일이나 고용관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이병렬·김희자, 2017: 187), 임금 조건이나 노동시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모국어 계약서도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결국에는 원치 않는 성매매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박찬걸, 2021: 159). 이 과정에서 언어폭력, 학대나 감시 등 물리적 폭력, 연락 차단, 여권 및 외국 인등록증 압류, 감금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하고(이병렬·김희자, 2017: 188), 입국하기 위해 비자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선불금이라는 일종의 부채로 책정되어 경제적으로 예측되는 경우도 있다(박찬걸, 2021: 159).

예술홍행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여성 중 일부는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공연 외 유흥접객행위와 성매매 등을 강요받게

되며(이병렬·김희자, 2017: 185), 이들 외에도 태국 등 비자면제 협정국에서 입국한 여성의 일부 또한 유흥업소에 들어가 원치 않는 성매매를 하게 된다. 이들은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하더라도 생계유지나 강제추방을 빌미로 한 협박 때문에 의사에 반하여 성매매를 지속하게 된다(박찬걸, 2021: 160). 또한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또는 장시간 근무에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책정된 매상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결국 성매매와 출장 데이트 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이병렬·김희자, 2017: 185-186). 이처럼 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취약성이나 체류 자격의 불안정을 빌미로 인신매매적 특성을 가진 성착취에 내몰리고 있으나, 국내 형법에서 이들이 당한 범죄피해를 인신매매 피해로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여 인신매매피해자로서 받아야 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찬걸, 2021: 166-167).

이에 따라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소라미, 2016; 신윤진, 2017; 이병렬·김희자, 2017; 정도희, 2019; 박찬걸, 2021). 첫 번째로 피해자 식별 체계 마련이 제안되었다. 관련하여 한 연구는 피해자 식별지표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인신매매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피해자의 귀국과 송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정도희, 2019: 127-132). 유사한 연구에서도 단속 및 수사 현장에서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권 압수나 부당한 근로 기준, 기망 요소가 포함된 계약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행위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매매 여성들을 인신매매피해자로 식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찬걸, 2021: 173-175).

두 번째로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이 제안되었다. 관련하여 한 연구는 형법 내에 인신매매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면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신매매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를 식별하고, 식별 이후에는 피해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것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구금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정도희, 2019: 137-139). 또 다른 연구에서도 사법기관이 이주여성을 ‘거짓 고소인’이나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통합된 법·제도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신윤진, 2017: 151-153).

세 번째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제안되었다. 한 연구는 예술홍행비자 제도가 성착취나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들이 합법적 형태로 발생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을 지적하였으며(신윤진, 2017:

144), 유사한 연구 또한 예술홍행비자 발급 시 검증 단계를 강화하거나 해당 비자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정도희, 2019: 132). 실제로 홍행비자와 관련된 인신매매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도 형법과 출입국관리법, 풍속영업법을 개정하여 홍행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여성을 단속하고 홍행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소라미, 2016: 129-131). 외국인 여성들을 초청하는 업자 대상의 규제도 강화하여 인신매매 범죄나 외국인 불법취업에 관여한 자는 외국인 연예인을 초청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으며, 그 결과 홍행비자 소지 필리핀 여성의 숫자가 급감하는 등 성착취 인신매매 발생이 감소하였다(소라미, 2016: 134). 이는 외국인 여성 대상의 성착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소라미, 2016: 134), 비자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

3.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지표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3월 27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를 제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23.3.27.).

피해자식별지표의 내용 중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세부 점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지표는 ‘모집’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연락망을 통하여, 또는 취업 광고를 보고 모집인을 만나 수수료(중개료, 이탈보증금 등)를 주기로 약속하는 것’과 ‘운송’ 과정에서 ‘살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소지, 다른 나라로 이동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을 시킨 사람과 목적지까지 동행한 경우’,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입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경우’ 등 ‘은닉’의 요소가 있었던 경우와 ‘모집을 한 사람 또는 이동시킨 사람에 의해 제3자에게 인계된 경우’와 같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경우가 인신매매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23.3.27.: 4).

또한 인신매매등의 ‘수단’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동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된 경우’와 같이 ‘위력’의 요소가 있는 경우와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고지) 들은(받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나 근로조건이 달랐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경우', 즉 '위계'의 요소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본인 또는 가족이 모집인에게 진 부채, 급여통장이나 신분증 같은 서류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등, 통제로 인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 등으로 규정되었다(여성가족부, 2023.3.27.: 5-6).

마지막으로 인신매매등의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변제를 구실로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한 경우'나 '자유의사로 일을 그만둘 수 없었거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받은 경우', 그리고 노동력의 착취 및 장기적출 등의 착취가 포함되었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성적착취를 당한 경우'와 같은 '성매매와 성적착취' 또한 인신매매의 목적 중 하나로 명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23.3.27.: 6-7).

고시된 피해자식별지표는 인신매매등의 '행위', '수단', '목적'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점검표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를 신속·정확하게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인신매매 '수단'이 점차 교묘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에 경제적·물리적·정서적 통제 수단까지를 포괄하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피해자를 식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잔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존 연구들은 성매매나 성착취 인신매매 중 일부 과정에 대한 사안만을 다루고 있어 인신매매 범죄의 발생 및 피해자 식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포착하고 어려움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연구 참여자들 대상의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외국인 여성이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유입되는 경로와 성매매 환경,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의 피해자 식별과 이에

따르는 어려움 등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식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피해자식별지표를 검토하여 효과적인 피해자 식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법률적 미비점이나 처벌의 한계 등만을 논의한 선행연구에서는 담지 못했던 성착취 인신매매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성착취 인신매매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활동가, 경찰, 변호사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내었기 때문에,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또한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심층면접 수행과정

성매매 등 성착취 인신매매는 그 특성상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발생 실태를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시각을 담기 위해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층면접 대상자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성착취 인신매매라고 인식하는 범위나 피해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성착취 인신매매의 특성상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인신매매 관련 활동가나 경찰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성착취 인신매매와 관련된 활동가와 변호사, 전문가, 경찰 등 19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35회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나 언론보도를 검토하여 성착취 인신매매 분야에서 피해자를 지원한 활동가 및 변호사나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연구 대상으로 섭외하였으며, 추가로 성매매 관련 단속이나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을 섭외하여 피해자 발굴이나 식별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조치 현황 또한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에 앞서 전화로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뒤 동의서를 메일로 발송하여 회신받았다. 인터뷰 일시를 조율한 뒤 전화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

고 각 인터뷰는 최소 20분에서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 시작 전 피면담자 신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심층면접 전 피면담자의 동의를 받고 심층면접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취본을 작성하였다. 녹취본의 내용을 검토하며 연구에 적합한 부분을 선정하였고 이를 주제에 따라 분류한 뒤 정리하였다.

2.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성착취 인신매매와 관련된 활동가와 변호사, 전문가, 경찰 등 총 19명이다. 이때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을 갖추었거나 관련 연구 경험이 많은 경우 2회에서 3회까지 확대해 총 35회의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먼저 성매매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 5명을 제외하여 성매매 분야의 현황과 피해자 발굴과 보호 및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5명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총 9회의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3명을 대상으로 총 6회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한 경험과 지원 시 문제점, 현행 관련법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이어서 학계 등 기관에 소속된 관련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총 11회의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관련 단속 및 수사 경험이 있는 광역시도 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의 경찰 5명을 대상으로 총 9회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찰의 성매매 단속 방식이나 피해자 발굴 및 식별과정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와 연구 일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 및 질문 사항

사례번호	분야	1차 면접일자	2차 면접일자	3차 면접일자
활동가 1	외국인 성착취	2022. 5. 27.	-	-
활동가 2	외국인 성착취	2022. 6. 24.	2022. 8. 1.	-
활동가 3	성매매	2022. 7. 26.	2022. 7. 27.	-
활동가 4	외국인 성착취	2022. 9. 7.	2022. 9. 8.	-
활동가 5	성매매	2022. 9. 8.	2022. 9. 28.	-
변호사 1	여성인권	2022. 7. 6.	-	-
변호사 2	인신매매	2022. 8. 2.	2022. 8. 11.	2022. 8. 12.

사례번호	분야	1차 면접일자	2차 면접일자	3차 면접일자
변호사 3	성매매	2022. 9. 8.	2022. 9. 9.	-
전문가 1	형법·성매매	2022. 8. 12.	2022. 8. 16.	2022. 8. 17.
전문가 2	성매매	2022. 8. 12.	2022. 8. 13.	-
전문가 3	형법·경찰행정	2022. 8. 12.	2022. 8. 13.	2022. 8. 14.
전문가 4	형법	2022. 9. 8.	-	-
전문가 5	성매매	2022. 7. 25.	-	-
전문가 6	성매매	2022. 7. 26.	-	-
경찰 1	성매매	2022. 8. 8.	-	-
경찰 2	성매매	2022. 8. 9.	2022. 8. 10.	-
경찰 3	성매매	2022. 8. 11.	2022. 8. 12.	-
경찰 4	성매매	2022. 8. 12.	2022. 8. 19.	-
경찰 5	성매매	2022. 8. 17.	2022. 8. 18.	-

3. 심층면접 질문 내용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성착취 인신매매의 현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활동가와 경찰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굴한 경험 및 피해 사례와 피해자가 처한 환경을 질문하고, 특히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매매 피해자가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겪는 상황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활동가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과 관련 권익보호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관련 법의 한계와 피해자의 보호 및 식별의 어려움 등을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성매매 환경에 노출되며 피해 이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지되어 보호나 지원을 제공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질문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심층면접 내용

주제	내용
피해자 발굴 경로	- 피해자를 알게 된 경로 -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 사례
피해 환경	- 성착취 피해자 입국 경로 및 업소 환경
성매매 피해자 수사과정	- 성매매 수사 경험 내용 - 피해자 발굴 경험 - 성매매 피해 여부 확인 및 절차 -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 성매매알선자 수사의 어려움 - 성매매 수사 개선 방안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 및 식별	- 피해자 발굴 및 기관 간 협조 -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체류 지위 문제 -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원 서비스	-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 수사/재판 과정의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 피해자 체류 지위를 위한 제도적 지원 서비스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역할	- 권익보호기관의 현장 조사 및 피해자 판정 - 권익보호기관과 경찰과의 협조 및 정보공유 -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권익보호기관의 역할

IV. 연구 결과

1. 성착취 인신매매의 현황

먼저 심층면접을 통해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의 현황, 즉 ‘피해자의 유입경로’와 ‘성착취 피해자가 처한 환경’을 살펴보았다. 이때 활동가와 경찰 모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여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착취 인신매매와 그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성매매 현장에서 ‘피해자 식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1)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와 관련하여 활동가와 경찰 간 인식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직접 접하는 여성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 정도가 심한 여성은 활동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 활동가들

은 피해가 심각한 사례를 접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의 경우에는 단속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착취 인신매매는 불법적 속성이 많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를 통해 부분적으로 파악한 실상을 종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활동가들은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업으로 내몰린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 이들을 피해자로 식별하고 보호·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활동가들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외국인 여성들은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국 과정에서 발생한 빚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업주가 시키는 대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 이처럼 기망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늘어난 부채 때문에 성매매를 지속하게 되는 구조는 인신매매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태국에서 (한국에서 하는) 건전한 마사지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사지를 배우고 입국하였다. 그러나 도착해서 일하게 될 마사지업소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 앞으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출국 전 알려주었던) '건전 마사지' 업소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건전한 마사지업소로 옮겨졌는데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며칠 동안 그 업소에 있었는데 단순 마사지 일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빚이 생겨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에 너무나 무서워서 업주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 (활동가 1)

(태국 여성은) 안마라고 하면 그 자국에서 경험했던 그걸(마사지)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왔더니 유사성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 동의는 했죠. 네 마사지 맞아요. 자기 나라에서 알고 있는 마사지가 아니었던 거죠. (활동가 5)

활동가들은 특히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중 'E-6'이라는 예술홍행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다. 즉 예술홍행비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은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정보를 모른 채 들어오는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작업비와 입국을 위한 항공비 등이 비용으로 산정되어 부채가 되기 때문에 성매매로 내몰리게 된다. 또한 이 외에도 사증면제를 받아 비자 없이 입국하거나(무사증 입국자) 단기체류비자만을 소지한 채 입국한 뒤,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며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E-6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태국 여성들이라든가 사증 면제로 입국하는 분들은 남미, 중미 국가 또는 태국, 러시아 이런 분들은 전국에서 유입되어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활동가 2)

마사지 업계 또는 오피스텔 성매매. **(이분들 무슨 비자로 입국하나요?)** B-1인데요, 이게 사증 면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기체류겠네요.)** 네. 90일이에요. **(90일 동안 체류?)** 저는 사실 이 기간을 딱 지켜서 나간 여성을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90일 동안 체류를 하고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여성들을 많이 봤어요. (활동가 2)

한편 경찰은 활동가들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이 성매매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거나, 최근에는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동일 국가 출신의 사람들의 SNS를 통해 정보를 얻어 입국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외에도 일부 외국인 여성은 농촌 등에 취업해 일하다가 돈을 더 많이 벌 목적으로 성매매업에 유입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은 굉장히 많고요. 태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여기로 옵니다. 와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취약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일부러 속칭 보찌(수수료)를 주고 와서 돈을 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태국 애들은 정말 많고요. 제가 들어본 걸로 처음에는 딸기밭에서 일했다, 논산, 원래 자기 딸기밭에서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힘들고 그래서 여기로 왔다고, 이거 하면 태국 친구가 돈 되게 잘 번다고 해서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여성들도 있고. (경찰 2)

브로커를 통해서 하면은 돈(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먼저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나름대로 SNS 통해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자발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럼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죠. (경찰 3)

2) 성착취 피해자가 처한 환경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활동가와 경찰 간의 인식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활동가들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근무하는 업소의 환경에서 인신매매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업주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는 채울 수 없는 수준의 '주스' 판매 할당량을 부과하여 간접

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다.

필리핀 출신 사례를 보면,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클럽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공연을 기대했는데 단 한 번도 공연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주스 포인트'라는 시스템이 있어 여성들이 클럽에 오는 구매자들에 주스를 사달라고 구걸하는 시스템 있는데, 2주에 200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만원 정도가 1포인트로 200포인트는 2백만 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통 '주스'가 20달러이므로 2포인트를 받는 것이다. 20달러 술 구걸로만은 200포인트를 2주 안에 만들 수 없다. 즉 성적 서비스가 있는 '주스'로 매상을 올리라는 것이다. 성적 서비스가 있는 '주스'는 80-100달러이다. (활동가 1)

또한 활동가들은 성매매 업주들이 여성들의 이동을 통제하거나 감시한다고 설명한다. 즉 일부 성매매 업주는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의 이동을 감시하며, 이들의 신분증을 압수하여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압수 외에도 신분증을 온라인에 공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인 여성의 경우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업주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하여 증거 수집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외출을 통제하나요?) 몸은 자유롭지만 도망가면 그 여성의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SNS에다가 올려버린 업주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여성들이 도망가면 그 여성 개인정보라든가 그 빛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SNS에 올라가기 때문에 몸이 자유로워도 통제는 굉장히 심한. (활동가 2)

여성들이 뭐 편의점에 가려고 해도 웨이터랑 같이 가야 해요. 그런데 웨이터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 이 동네 지역 모르잖아, 가다가 길 잃어 버리면 어떡해, 나랑 같이 가'라고 하지만 그거는 감시인 거죠...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핸드폰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주가 핸드폰을 만들어 주고 업주 명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거기에다가 증거를 남겨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정보를 지우게 만들어요. (활동가 5)

한편 경찰은 성매매 현장이 납치 및 감금을 통해 성착취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성매매 여성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업주보다는 성매매 여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업주가 여권을 뺏거나 감금하고 감시하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이나 수사

중에 이러한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로 인지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업주 상대로도 물어보면... 오히려 조금 여성들이 갇히 된 위치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만약에 대금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업주들은 3만 원 가져가고 여성들이 7만 원 가져가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돼 있고, 잘못해줘 버리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또 브로커가 한 명 있거든요. 이런 데만 이렇게 하는 전문 브로커가 또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여권을 뺏겨가지고 감금당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찰 4)

(외국인 여성이 휴대폰) 112 신고 한 통이면 업주들이 다 줄줄이 잡혀갈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개네들이 말할까봐, 업주들이 오히려 또 전전긍긍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여권을요 본인들이 지네 방에, 저희가 검거 현장에서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잖아요. 보면 여권 지네가 다 들고 있습니다 거의... 돈은 자기네가 거의 다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냥 바로바로 다 입금하고, '약간의 돈 더 받을 거 있어요, 사장님한테 돈 받을 거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봤는데 사장님한테 돈을 갚아야 될 게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찰 2)

3)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업주의 사전 교육이나 지시,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이 여성들은 성매매 행위자로 인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를 식별하고 보호 및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가 가장 가장 답답한 것도 예를 들면 이제 어디에서 외국인 여성 특히 이제 안마 시술소 이런 데 있잖아요... 가서 거기서 '당신 도와드릴 테니까 여기 사실대로 말해도 된다,' 이래도 이 사람들 아니라고 그런 일 없었다고 현장에서 (말하고).. 예를 들면 자기는 '피해받은 게 없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계속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이나 경찰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되죠... 도움을 드린다고 해도 자기는 '몰라, 몰라, 몰라'만 하시고요 심지어... 그리고서는 우리는 도움 받을 거 없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쪽에서 보호조치를 하기가 경찰이나 담당 우리 여가부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피해받은 거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사람은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출입국 관리 위반 업무가 돼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매매 행위자가 되어

버리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신분이) 범죄자가 돼 버리잖아요.
(활동가 3)

또한 피해자 상담 경험이 있는 활동가 또는 변호사는 경찰이 성매매 피해의 범위를 ‘물리적인 감금 여부’나 ‘자발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소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인 통제’나 ‘심리적인 지배’ 등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성착취 피해자를 식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성매매에 대한 돈을 여성이랑 업주랑 반반 받았는지 업주가 다 가져갔는지 아니면 여성이 다 혼자서 가질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과연 감금이었는지도,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여성들이 도망갈 수가 없었는데 ‘그럼 SNS에다 신분을 다 노출한다’ 이런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들은 도망갈 수가 없었는데 경찰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발성, 비자발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거를 파악을 하려면 알고 왔고 어느 정도 알고 왔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활동가 2)

외출도 자유롭게 못하고 그런 신분증 같은 것도 업주가 보관하고 아무리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이게 과연 자발적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데 일단 ‘내가 하고 내 발로 찾아갔어요, 끌려간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자발성이 척도가 되어가지고 ‘너는 니가 원해서 한거니까’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경찰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찰들도 ‘요즘 세상에 인신매매가 어디 있냐?’고 바로 딱 그 말부터. ‘얘네 다 돈 벌려고 해요.’ 딱 그 말. 아니 그럼 그래서 돈을 벌면 이게 인신매매가 아닌 건가? (변호사 3)

2.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및 개선방안

이어서 심층면접을 통해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피해자 식별체계에 대한 개선의견

심층면접이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가 이루어지기 전 수행되었기 때문에, 인신매매피해자 식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인신매매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수법이 교묘해져서 식별지표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현재 신고의무자에게 식별지표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자가 자의적으로 인신매매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신고하는 데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신매매) 식별지표라고 하는 게 딱 누군가를 봐서 이 사람이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하는 걸 판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인신매매를 당했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정도만 꼬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디테일할수록 실제로 포섭할 수 있는 케이스는 줄어든다고 우리가 식별지표를 만드는 이유는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최대한 끌어내서 우리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이제 이걸 소화하기 위한 건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만들수록 활용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문가 3)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따라서 이처럼 인신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신매매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저도 한번 인신매매방지법 그것을 봤는데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그런 식으로 있던데 어쨌든 성적 착취는 성매매를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피해자냐 아니냐 여부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고...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느 정도 선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인지 이런 기준은 없고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또 담당 형사의 기준으로도 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경찰 4)

인신매매방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그리고 현장에서 제기된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식별지표가 고시되었다. 그러나 식별지표의 고시만으로는 실효성 제고를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에는 ‘성매매 관련 업무 매뉴얼’과 ‘성매매 피해자 식별지표’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 현장에서 이를 100%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식별지표를 마련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에 (성매매피해자) 식별지표가 한번 만들어서 내려왔었잖아요... 성매매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인 꼭 동석케 하고 성매매 피해 상담소에 연락하게끔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꼭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성매매 여성으로 의심될 때는 우선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지 협박을 당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감금을 당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강요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권이나 그런 것들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이게 또 큰 포커스거든요. 그다음에 또 위계에 의한 방법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집 당시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는지 그럼 실제 그 일과 같은 건지 아니면 모집 당시에 약속받았던 근로 조건 같은 경우와 다른지 아니면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은 그런 관계에서 어떤 피해를 당한 게 있는지... 그런데 막상 보면 일상에서는 단속하고 이거를 보통 단속이 심야에 이루어지잖아요. 심야에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우리도 피곤한 상태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이 100% 잘 된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경찰 5)

아무래도 우리가 피해자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현장에서부터 다각도로 질문을 던져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결국 우리 경찰관 단속하는 사람들 역량이 문제잖아요. 이게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조금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경찰이 그걸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경찰 5)

2) 피해자 식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사회인식 개선

피해자 식별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성매매 피해자가 경찰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알선자에 대한 제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선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하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협조하지 않는다. 심지어 보호나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보호소로 가야 하는 등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성매매 알선자를 검거를 해야 되는데 성매매 여성들도 잘 협조를 안 해요. ‘본인들이 처벌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숨겨요. **(성매매 여성이 처벌되지 않으면 진술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성매매는 실제 이제 성관계를 한 여성의 진술이나 또 증거라든지 아니면 알선자하고 주고받은 카카오톡 아니면 텔레그램 이런 증빙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계속 부인하면 아무런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소를 할 수가 없죠. **(노르딕 모델)** 그거는 충분히 이제 물론 법률적으로 검토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 합의 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본인이 처벌을 안 받는다는 조건이 형성되면, 나 사실

이렇게 이렇게 했고 누구한테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자세히 진술할 수가 있죠. 본인
이 처벌받는데 내가 나 처벌받기 위해서 내가 다 까발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경찰 3)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
전이 보장될 수 있는지, 체류 자격 보장 등이 이루어지는지 대한 회의감이 있
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단속된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바로 지원기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함
을 지적하였다. 즉 현재는 경찰 단계에서 바로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져 지원
기관의 개입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경찰 단속이나 조사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도
록 하는 절차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으나 수사기관 자체도 그렇게 신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내가 이 말을 다 얘기해도 수사기관한테 다 털어놨잖아 내
가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정당한 내가 보상이라든가 이후에 내 안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제대로 말을
안 하는 거라고 봐야. (전문가 1)

사실 저희가 강제퇴거 당한 여성들을 만나지를 못했던 거죠. 대부분의 거의, 왜냐하
면 상담소나 쉼터에 연계를 안 하고 (강제)퇴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저
희가 합동 단속 같은 데 갔을 때 저희가 그러면 업소에 들어갔는데 여성들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 신분으로 받을 것인지 사실 저희가 개입
했을 때는 그거를 상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해요. 여성에게 그거를 결정하시라,
어떻게 조사를 받을 것인가. 근데 그렇다면 저희가 상담을 되게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사 전에 상담을 진행했을 때 그러면 한국 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피해자인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로 조사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단속
을 했고 여성들을 경찰서로 데려왔고, 근데 그러면 빨리빨리 조사를 진행을 해야 하
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담원이나 활동가가 없으면 그냥 바로 진행을
하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퇴거를 하겠죠. 근데 상담원이 개입했을 때 그게 1시간,
2시간 안으로 빨리 결정하시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 절차에서
는 일단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
각이 들어요. (활동가 2)

또한 외국인 피해자는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서툴기 때문에 질 높은 통역으로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어권이 아닌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인 전문지식을 갖춘 통역사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한 명의 통역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통역사가 일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않게 전달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떤 걸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긴급 전화도 그렇고요. 지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언어다. 언어가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가능해야 되는데 실은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풀이 있다면 좋겠죠. 같은 풀이건 아니건. 아마 지역에는 굉장히 한정적인 자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제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짐작하는 게 사람이 한 50명씩 있으면 풀로 구성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그래서 외국어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 6)

따라서 활동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제공되는 통역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특히 경찰의 인력풀에 속한 통역인의 경우 성매매에 관련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통역사 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증언 내용을 녹화하거나 녹취록을 만들어 다른 통역사로 하여금 검증하게 하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성착취 피해 사례 관련 전문 통역인 부재하다. 수사기록은 통역인이 말하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통역인이 성착취 피해 관련 단어를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활동가 1)

통역은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인신매매방지법) 44조에 통역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통역이나 번역을 지원한다는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난민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 통역을 하다 보면 이게 난민법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시행령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통역 인력, 전담할 수 있는 통역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전문가 4)

저는 사실 녹취록 만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 녹화 좀 필수로 '이거 영상 녹화하시겠어요?'하는 게 아니고 좀 필수로... 이게 (통역이) 맞게 된 건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사후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서류 같은 게, 번역이 안 되거든요 사실. 민사나 가사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고 우리 형사에서는 7개인가 14개인가 하여튼 그게 번역이 돼 있는 게 있긴 해요. 기본적으로 공소장은 당연히 번역해서 보내주고 이게 '내가 뭐 때문에 조사받는 건가' 알아야 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 모든 서류가 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이 사람 피해자든 피의자든 권리가 보장이 되려면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서류를 직접 내가 보고 번역된 걸로 받아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많고. (변호사 3)

한편 피해자의 현실을 정확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안한 지원단체 연계나 통역 서비스 외에도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또한 요구된다. 인신매매는 그 중대성에 비해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는 범죄이며 심지어 현재에는 발생하지 않는 사라진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착취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적극적인 피해자 식별 및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착취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인신매매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국내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낮은 수준의 인식으로 인하여 외국인 여성 대상 성착취 사건의 수사와 처벌이 어렵다. 수사 활성화를 위해 이들 피해자를 보호하고 체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피해당한 여성의 권리회복 문제도 있지만, 향후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피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 외국인 여성 성착취 피해 사건이 사건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향후 관련 수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사건이 잘 드러나지 않아, 일반 대중은 한국 내에 이러한 피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활동가 1)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여 어떤 것이 인신매매에 해당하는지 알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어 향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자성을 이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외국인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사실 조사를 해도 ‘내가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봤자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가지는 인신매매에 대한 통념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그 통념을 이분들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인신매매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3)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들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모집 유인 과정에 와서 한국에 와서 어떤 업소에 가서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인신매매의 전체 코스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이동까지 가고 업소를 옮겨 다니거나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그 과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부 인신매매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은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피해자로서 보호를 해 줄 것이고 여기서 어떤 도움을 필요하고 당신은 뭐냐 위험한 상태로 강제출국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당신이 원하는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줘야 하거든요. (활동가 3)

또한 현재 피해자식별지표가 마련된 상황에서 해당 지표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물론 잠재적 피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지표에 포함된 행위, 수단, 목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신매매는, 그러니까 사회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인신매매가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새로운 법에 따른 인신매매는) 이런 것입니다 (소개해야죠)... 일단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단계별로 나눠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나 해야될 것 같고, 예방이라면 결국에는 관련 분야 종사자, 관련 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훈련 이거거든요. (전문가 1)

이제 사실 (인신매매 방지) 교육을 한 다음에나 가능할 거고 당장은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고 당장은 사실 피해자 측에서 이걸 인신매매라고 인식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출발한다는 의미 정도인 거고 뭐랄까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형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한 10여 년 정도 걸렸지 않습니까. 아마 인신매매도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3)

V. 결론

본 연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신매매방지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최근 문제로 떠오른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원단체 활동가, 경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현재 한국의 성착취 인신매매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성착취 인신매매 현황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와 ‘성착취 피해자가 처한 환경’, 그리고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의 식별’에 관련된 현황과 어려움을 살펴보았으며, 동시에 경찰과 지원단체 활동가 사이의 시각차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유입경로를 살펴보면, 경찰과 활동가의 시각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서 실제로 할 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국 후에는 부채 때문에 성매매업으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과 활동가는 성착취 피해자가 처한 환경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성매매가 더 이상 납치나 감금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강압적 성착취와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근무 조건에 인신매매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업주들이 과도한 ‘판매 할당량’ 등을 부과하여 성적 서비스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입국 시 발생한 비용을 부채로 책정하여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성적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착취 피해자를 발굴하고 식별해내는 과정에서도 경찰과 활동가의 시각차가 확인되었다. 경찰의 경우에는 성매매업 자체에 인신매매적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들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물리적 감금이 없고 자발적인 경우에는 피해자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 상담 경험이 풍부한 활동가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경찰이 성착취 피해의 범위를 다소 소극적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간접적인 통제나 심리적 지배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식별할 필요가 있

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효과적인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을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식별지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인 2023년 3월 피해자식별지표가 고시되었으며 해당 지표 내에는 인신매매등의 ‘행위’, ‘수단’, ‘목적’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점검표와 다양한 피해의 예시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실제로 해당 지표에는 기존 외국인 성착취 인신매매피해자 상담 및 지원 사례나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다양한 사례에서 확인된 피해 유형들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물리적 통제수단 외에도 ‘이주과정에서 발생한 이동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이 불가능했다’와 같은 경제적 통제나, ‘업소를 탈출하면 가족 및 지인 등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서적인 통제 또한 인신매매등의 ‘수단’ 요소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으로 명시하여 보다 포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지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성매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착취 인신매매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관련 정보를 잠재적 피해자나 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성착취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도출되었는데, 단속 및 수사 단계에서 지원기관 활동가를 연계하여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외국인 피해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제공되는 통역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2023년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지만 처벌에 대한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신매매피해자는 있지만 인신매매 범죄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실제로 UN인신매매방지지의정서 비준에 따른 국내 이행 입법을 갖추기 위해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인신매매죄가 신설되었으나 형법에 포함된 인신매매죄의 처벌 규정은 UN 의정서의 인신매

매 기준과는 동떨어져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형법의 인신매매죄가 적용된 건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동안 30건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장응혁·정진성, 2022: 231).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인신매매방지법 내 처벌규정의 별도 도입을 논의하는 등 인신매매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차인순, 2021: 65; 장응혁·정진성, 2022: 232에서 재인용). 인신매매 처벌 조항의 불완전함은 피해 신고나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하기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신매매방지법을 시작으로 향후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착취 인신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지원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경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정확한 발생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성매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심층면접이라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주관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수행되는 연구에서는 별도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이 유사한 경험을 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 결과가 축적된다면 음성적으로 발생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두레방(2007). 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경기도 연구
용역 사업보고서.
- 박찬결(2012).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 연구*.
제20권 제1호. 317-357.
- _____(2014).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175-204.
- _____(2021). “호텔·유흥비자(E-6-2) 소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합리
적인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33권 제2호. 151-181.
- 소라미(2016). “일본의 인신매매 정책에 비추어 본 한국의 예술홍행비자 소지 이
주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인권법평론*. 16호.
21-141.
- 신수정(2016). “인신매매 방지법의 필요성과 국제노동기준”. *법학논집*. 제20권 제
3호. 207-230.
- 신윤진(2017). “예술홍행비자제도를 통한 이주여성 고용의 인권 문제와 법적 과제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기준과 외국사례에 비추어”. *법학논총*. 제41권 제1
호. 115-158.
- 여성가족부(2023. 3. 27).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여
성가족부고시 제2023-13호.
- 이미정·정연주·홍세은·정수연·장응혁(2022). *인신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병렬·김희자(2017). “예술홍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행위
대응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북아문화연구*. 50호. 177-204.
- 장응혁·정진성(2022).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에 대한 시론 - 국가인권위원회
와 미국의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을 소재로 -”. *여성연구*.
제113권 제2호. 229-252.
- 정도희(2019). “이주민 성적 착취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피해자학 연구*.
제27권 제3호. 119-144.
- 차인순(2021).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 제
정”, *국회보* 제653호.
- UNODC(2020). *Global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2020*. United Nations.
- U.S. Department of State(202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US
Department of State.

Abstract

Difficulties in Identifying Foreign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Seeun, Hong*

This study is conducted to confirm the current status of sexual exploitation suffered by foreigners and the difficulty in identifying the foreign victims, and to find ways to make improvement. To this end, a total of 35 in-depth interviews are conducted with 19 people, including support group activists, lawyers, police, and experts, and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se interviews are classifi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sexual exploitation in Korea,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many women sex workers coming from abroad and they are experiencing sexual exploitation, where they go through economic difficulties and emotional abuse even without physical control. However, in the case of the sexual exploitation involving human trafficking,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protect, and support victims due to the fact that the victims are not recognized as a "victim" and the uncooperative attitude of the victims. Considering this situation, it is discussed that to effectively identify foreign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victim identification system, such as developing victim identification indicators, and clear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along with improvement of social awareness.

Keywords : Human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Identification of Victims,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23년 3호
(통권 118호)
여 성 연 구

발 행 인	조 선 주 직무대행
편 집 인	이 미 정
등 록 일	1983년 11월 23일
등록번호	바-813
발 행 일	2023년 9월 30일
발 행 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불광동 1-363) TEL. 02)3156-7000(代) FAX. 02)3156-7007
인 쇄 처	리드릭 TEL. 02)2269-1919

